

[긴급 토론회]

다시 찾아온 에너지 위기, 기후-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박지혜,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정혜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세부 프로그램]

좌장 | 김혜정 공동대표(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발제1 |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대응 사례
윤성권 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발제2 | 우리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이헌석 정책위원(에너지정의행동)

토론 | 박수홍 팀장(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양연호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그린피스)
제용순 위원장(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안드레 팀장(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Contents 목차

01 | 인사말 3p

국회의원 박지혜 3p

국회의원 서왕진 5p

국회의원 정혜경 6p

02 | 발제

발제 1 :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대응 사례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발제 2 : 우리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03 | 토론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제용순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안드레 팀장



인사말

다시 찾아온 에너지 위기, 기후-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 토론회

2026.04.07. 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오늘 <다시 찾아온 에너지 위기, 기후·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뜻깊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함께 준비해주신 서왕진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그리고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에너지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나 경기 요인에 따른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시적 위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임시방편적 대응이나 사후적 처방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기적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입니다. 이 두 과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가야만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혁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망 투자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세계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다시 찾아온 에너지 위기, 기후·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토론회



국회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이번 「다시 찾아온 에너지 위기, 기후·에너지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토론회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화석연료 중심의 전원 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현재의 에너지 체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대응이 반복되고, 단기적 수급 안정에 치우친 정책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많은 화석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확대, 그리고 효율과 수요관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역시 원가와 수급, 그리고 시스템 전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4월 7일
국회의원 서왕진

<축사 국회의원 정혜경>

토론회 : 다시 찾아온 에너지 위기, 기후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최근 기후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계절별 가동률 상한(80%)을 해제하고, 원전 발전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우리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안보적 환경은 에너지 위기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찾아온 에너지 위기, 기후-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긴급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와 LNG의 상당수는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를 거칩니다. 이번 이란 전쟁뿐 아니라, 향후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 역시 동일한 위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우리는 LNG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화석연료 구매비용을 부담했고, 그 결과 한전의 부채는 20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곧 민생 위기로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재생에너지 정책은 후퇴했습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미국의 안보 전문가 집단, 전략적 위험위원회(Council on Strategic Risks)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는 한국에 단순한 기후 과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핵심 기둥이다. 에너지 정책을 안보 전략과 일치시킬 때, 한국은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고 미래 경쟁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이 위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많은 예산과 정책을 투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대응 사례

2026.4.7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

목차

1. 미국-이란 전쟁·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1.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주민수용성 제고 연구,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적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을 위해서 에너지시스템 모델링 분석을 특화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분야 다양한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www.gesi.kr

OUR MISSION Renewable Energy-based Transition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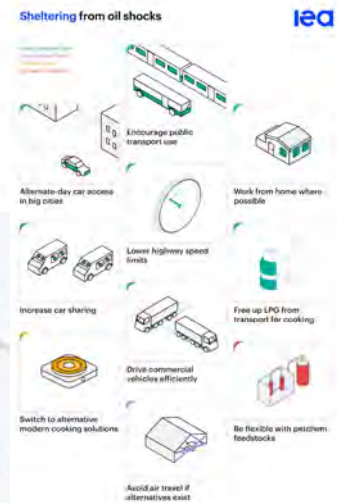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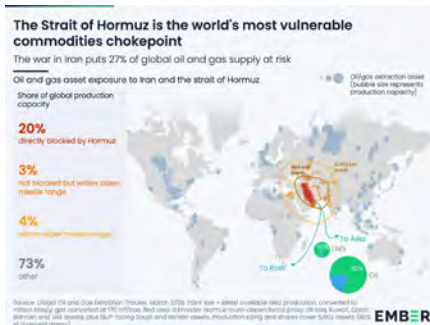


Copyright © 2026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현황

-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병목 지점
 -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된 석유와 LNG 80% 이상이 아시아 시장
 - 해협 봉쇄는 아시아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러우 전쟁 때와 반대 현상)
 - 전세계 LNG 공급량의 약 21%가 사라졌음
- IEA 4억 배럴 원유 비축량 방출 및 수요감축 방안 제시
 - 러우 전쟁 시 방출량의 2배가 넘음
 - 정부·기업·가정 수요감축 방안 제시
- 트럼프, 러시아 제재 일시적 완화, 이란 산 해상 원유 거래 한시적 허용
 - 세계 유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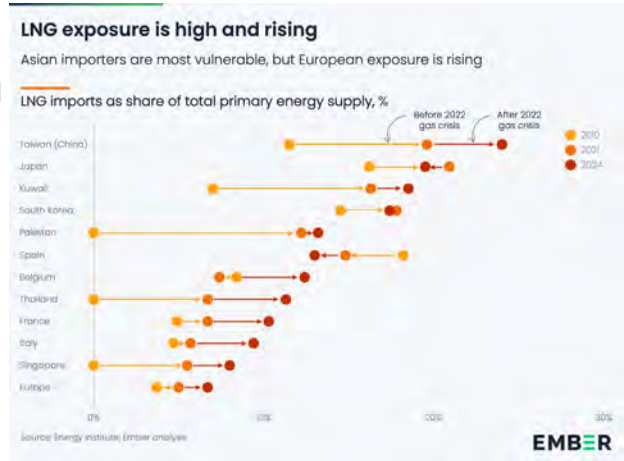
Copyright © 2026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대응 전략

■ LNG 의존도 상승

- 전세계 인구 60%가 LNG 순수입국에 거주하고 있음
- 최소 9개국에서 LNG 수입이 전체 에너지 공급의 10% 이상 차지
- 대만이 24%로 가장 높고, 일본(20%), 한국(17%)로 그 뒤
- 여러 국가에서 러우 전쟁 위기 이후 LNG 의존도가 상승했고, 이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https://ember-energy.org/latest-insights/the-energy-security-fall-out-from-fossil-fuel-fragility-to-electric-indepen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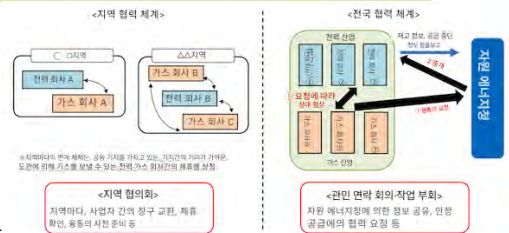
Copyright © 2026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동아시아

■ 일본

- 일본은 LNG공급 구조가 이미 다각화, 중동지역 물리적 의존도는 낮지만, 영향 존재함
- 민간 석유 비축 의무량 15일 인하(70일→55일), 국가 석유 비축량 30일분 방출
- LNG 조달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21년에 지역 연계방안, 전국 연계방안 마련
- 물가상승 부담 조치로 시행된 전기요금 보조금이 3월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전쟁으로 연료비도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전력회사 별로 4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중국

- 원유와 정제유 전반에 걸쳐 중동에 의존. 수입의존도 수치는 다른 나라 대비 높지만, 중국 에너지 시스템에서 의존도는 다소 제한적. 전력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가스발전 비중 4% 미만)
- 다만 산업 중 화학산업은 LNG 공급 부족으로 타격이 있을 것
-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임시 조절 조치 시행(휘발유 및 경유 각각 2,205위안/톤, 2,120위안/톤 인상되어야 했으나 1,160위안/톤, 1,115위안/톤 인상됨)

https://www.meti.go.jp/chuto_josei/index.html
https://www.itmedia.co.jp/smartjapan/articles/2603/31/news059_3.html
https://www.ndrc.gov.cn/xwdt/xwfb/202603/t20260323_1404296.html
<https://ieefa.org/resources/japans-diversified-lng-procurement-strategy-cannot-fully-shield-it-global-price-spikes>
<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26/03/Comment-Turmoil-in-the-Middle-Eas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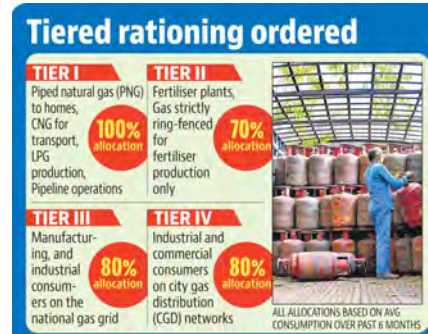
Copyright © 2026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남아시아

■ 인도

- '24년 기준 원유 세계 3위, LPG 세계 2위, LNG 세계 5위 수입국
- 매년 3,130만 톤 LPG 사용(수요의 60%인 약 2,000만 톤 이상 수입). 87%가 가정용이고, 나머지는 호텔, 식당 등 상업시설
- 정부 필수품법(Essential Commodities Act) 발동하여 우선순위 체계 마련
 - 1단계:필수 가정용 PNG, 수송용 CNG, 조리용 LPG 등 우선 배정
 - 2단계:비료공장은 평균 가스소비량의 70%
 - 3단계:차 산업 및 국가 가스망을 통해 공급받는 산업은 80%
 - 4단계:도시가스 상업 및 산업 소비자는 평균 가스소비량의 80%
- 우선 공급시설 수요 충족하기 위해 정유소 평균 소비량의 65% 공급. 가스 발전소 및 석유화학 시설 부분적 공급 감축. 국내 LPG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유소 LPG 생산량 극대화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home-lpg-gets-priority-hotels-fear-closure-govt-says-adding-production-as-oil-supply-hit-by-west-asia-crisis-updates-101773144074839.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india-government-invokes-esma-to-prioritise-lpg-production-for-domestic-use-as-west-asia-conflict-escalates-us-iran-war-101773185180230.html>
<https://thenewsmill.com/2026/03/demand-for-induction-cooktops-rises-to-1-2-lakh-units-daily-amid-lpg-shortage/>
<https://ieefa.org/resources/energy-power-play-indias-oil-and-gas-strategy-amid-us-iran-tensions>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남아시아

■ 인도

- 수요 측면 조정 조치도 포함. 등유와 같은 대체 연료가 공공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LPG 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 시설에서 바이오매스, 석탄, 연료유의 사용을 허용하는 임시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
- 가정에서는 일부 저소득층 사용자가 전통 연료로 회귀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전기 조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행동 변화가 나타남
- 가스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 상승과 마진 압박이 확산되고 있는 더 광범위한 양상을 반영함. LNG 연동 가격이나 LPG 공급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입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지, 소비자에게 전가할지, 아니면 생산량을 줄일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음
- 인도 에너지 전략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할 것.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은 발전 부문의 수입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동시에 조리 및 운송과 같은 최종 소비 부문의 전기화는 특정 용도에서 LPG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다만, 천연가스는 전환 연료이자 핵심 산업 원료로서 인도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남을 것으로 예상
- 인도의 LPG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자국 내 복지 및 정책적 과제로 이어지는 지를 보여줌

<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26/03/Comment-Assessing-Indias-energy-vulnerabilities-amid-the-Gulf-crisis.pdf>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남아시아

■ 파키스탄

- 공공기관 주4일제 시행. 공공기관 직원 중 50% 순번제 재택근무(필수 서비스 제외). 향후 2개월 간 모든 공용차량 60% 운행 중단. 모든 학교 2주간 휴교조치(3/16-31)
- 연방 및 주 정부 각료는 2개월 간 급여와 수당 없음. 연방 및 주 의회 의원 급여도 2개월간 25% 삭감. 정부 각료는 국익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출장 금지
- 세미나와 컨퍼런스는 호텔 대신 정부 청사에서 개최. 에너지 절약 위해 파키스탄의 날(3/23) 행진 취소



<https://indianexpress.com/article/world/pakistan-philippines-4-day-work-week-here-why-10573978/>
<https://apnews.com/article/iran-war-asia-energy-gas-oil-hormuz-d1265c39c990abb2dd43e037adb37c7a>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남아시아

■ 네팔

- 취사용 가스배급 시작(가스통 용량 절반인 약 7.1kg만 충전). 휘발유 가격 10% 인상. 취사용 가스사용량 줄이기 위해 가정에 인덕션 전환 촉구

■ 방글라데시

- 모든 공립 및 사립 대학 휴교(전력소비 감소 및 연료낭비 초래하는 교통 체증 완화). 대학 캠퍼스(기숙사, 강의실, 실험실 등) 냉방전력 소비 큼
- 5개 국영 비료공장 중 4곳 15일간 가동 중단.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확보된 가스는 발전소로 우선 공급

■ 스리랑카

- 공공기관, 학교, 대학 주4일제. 공공기관 재택근무 권고
- 연료 절약 위해 기차와 버스 운행 축소. 3/15부터 연료 배급제* 실시(일반 운전자 주당 15리터, 오토바이 5리터, 대중교통 최대 200리터 배정)

*QR코드 기반 배급제. 운전자는 사전에 온라인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아야 연료를 구매할 수 있음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bangladesh-shuts-universities-early-save-power-amid-energy-crisis-2026-03-0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mar/16/sri-lanka-four-day-week-oil-and-gas-iran-war>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iran-war-sri-lanka-four-day-work-week-conserve-fuel-reserve-599760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sri-lanka-tightens-fuel-rationing-supply-squeeze-deepens-2026-03-18/>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동남아시아

■ 필리핀

- 중동 5개국 원유 수입의존도가 97%.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수급에 큰 위협
- 3/24 세계 최초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행정명령). 공공기관 주4일제 시행(필수업무 제외). 공공기관 전기 및 연료 소비량 10~20% 감축 지시. 온라인 회의 실시 및 불필요한 출장 일시적 중단
- 지프니 등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에게 연료보조금 지급(약 139,000명에게 5000페소). 농어민에게도 연료비 지원 확대 예정
- 석탄발전 일시적으로 늘렸고, 값싸고 오염도가 높은 유로 II 기준 석유제품 제한적 허용(마닐라 '16년에 유로 IV 기준 연료로 전환)
- 필리핀은 소매 연료 보조금이 없어 유가 상승이 연료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 소비자들 부담 증가. 석유규제완화법에 따라 연료가격 상한제 시행할 수 없음. 노동계, 운송단체,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은 3/26-27 전국적으로 파업(석유규제완화법 폐지 요구)

■ 인도네시아

- 연료 배급제 시행(대당 50리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재택근무 권고, 공용 차량 사용 절반으로 줄이고, 관료들 출장도 최대 70%까지 줄일 것



https://pco.gov.ph/news_releases/president-marcos-orders-temporary-4-day-workweek-in-some-govt-agencie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philippine-president-declares-energy-emergency-over-middle-east-conflict-risk-2026-03-24/>
<https://newsinfo.inquirer.net/2201056/groups-back-2-day-transport-strike-this-is-everyones-fight>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philippines-says-working-with-washington-obtain-oil-us-sanctioned-countries-2026-03-25/>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philippines-allows-temporary-use-dirtier-fuel-amid-middle-east-crisis-2026-03-22/>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middle-east-war-indonesia-rations-fuel-prices-soar-6028666>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동남아시아

■ 태국

- 태국 전력생산 66%가 천연가스에 의존. GDP의 7% 이상을 석유 및 가스 수입에 지출
- LNG 제약 해소하기 위해 석탄발전소(0.6GW) 재가동 명령. 수력 발전량 증대 모색
- 국내 비축량 유지하기 위해 석유수출 중단(미얀마, 라오스 제외)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지시(온라인 회의 및 엘리베이터 이용 최소화). 공공기관 전면 재택근무 시행
-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특히 24년부터 지붕형 태양광 규제 완화 조치 시행. 최근 3/3 주거용 태양광 구매 및 설치하는 개인에게 최대 20만 바트 소득세 감면 도입

Cost of sourcing a spot LNG cargo in Thailand's currency has more than doubled in March 2026



Source: Pacific Exchange Rate Service, trading.com, media reports, IEEFA calculations.

IEEFA

■ 베트남

- 중동(쿠웨이트) 원유 의존도 높아서 정유 및 석유화학 부분 피해 예상. '23년 기준 화석 연료 발전 비중 약 81%
- 에너지 절약, 수요 억제 및 재생에너지 확대

<https://ieefa.org/resources/iran-conflict-exposes-thailands-lng-vulnerability?>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cy/40063299>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유럽

■ EU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 대상 수송부문 자발적인 수요 절감조치 요구

■ 독일

- 석유 비축량 방출. 독점금지법 개정하여 하루에 한번만 가격인상 허용. 가격 감독 강화

-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일정 논쟁 재점화. 업계는(高 가스 가격, 低 가스 비축량 고려할 때) 계획된 폐지 일정을 연기할 것을 촉구

■ 슬로베니아

- 오스트리아 등으로 주유관광 현상 나타남

- EU 최초로 주유소 연료 부족으로 연료구매 제한

(일반 운전자 50리터/일, 기업 및 농민 등 우선 이용자의 경우 200리터)



<https://www.politico.eu/article/brussels-urges-europeans-to-travel-less-to-avoid-spiraling-energy-costs/>
<https://www.wkz.de/presse/foe-nachrichten/thomas-puls-freigabe-wird-maerkte-beruhigen.html>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ermany-may-have-slow-coal-plant-closures-merz-says>
<https://www.bbc.com/news/articles/c77m4z6zvm0?>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유럽

■ 유럽 전기차, 태양광 관심 증대

- 프랑스 온라인 중고차판매업체(Aramisauto) :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전기차 판매 2배로 증가(6.5%→12.7%). 같은 기간 가솔린 차량(34%→28%), 디젤 차량(14%→10%)

- 네덜란드 OLX: 프랑스, 루마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 자사 마켓 플레이스 전기차 고객 문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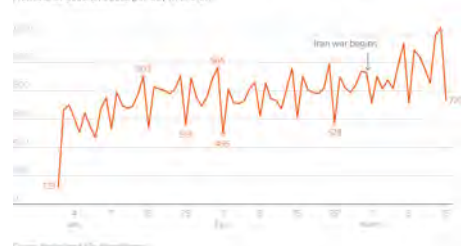
- 노르웨이 최대 중고차플랫폼(Finn.no):자사 사이트에서 전기차가 디젤 차량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등극

- 영국 E.ON: 태양광 관심 2/23~3/1 사이 증가. 3/2~8 사이에 추가로 63% 관심 급증

- 독일 Enpal BV : 전쟁 이후 태양광과 히트펌프에 대한 문의 약 30% 증가

- 독일 1KOMMA5° GmbH: 태양광 관심 거의 2배로 늘어남

Used EV sales jump in the UK after the start of the Iran conflict
Number of used EVs sold per day in the UK



<https://www.euronews.com/2026/03/31/iran-war-sparks-renewables-boom-as-europeans-rush-to-buy-solar-heat-pumps-and-ev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used-ev-sales-jump-europe-iran-war-drives-up-petrol-prices-2026-03-26/>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아메리카

■ 미국

- 우정청(USPS) 연료비 및 운송비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포비용 8% 인상 통보. 우정규제위원회 승인이 될 경우 26.4.26~27.1.7까지 가격 유지될 예정
 - 존스법 60일간 면제 조치. 이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 60일 동안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 가능. 다만, 전 세계적인 원유 공급 차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에 운송되는 화물은 미국 내에서 건조, 소유 및 운항되는 선박을 통해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100년 역사의 법률

■ 캐나다

- 물가 급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과 기업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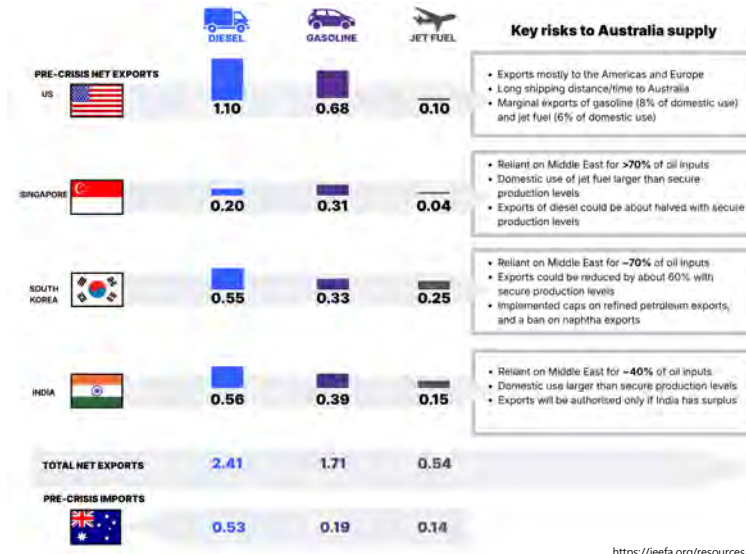


<https://www.nytimes.com/2026/03/25/us/politics/usps-surge-prices-fuel-iran.html?>
<https://about.usps.com/newsroom/national-releases/2026/0325-usps-announces-transportation-related-time-limited-price-change.htm>
<https://epic.uchicago.edu/news/trumps-jones-act-waiver-how-oil-prices-could-be-impacted/>
<https://www.reuters.com/business/canada-offers-financial-aid-farmers-companies-affected-by-iran-war-price-spikes-2026-03-20/>

Copyright © 2026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영향

■ 전쟁 전 주요국 석유제품 수입량(호주) 및 순수출량(기타 국가) 비교(백만배럴/일)



<https://ieefa.org/resources/its-time-australia-reduce-its-oil-demand/>

Copyright © 2026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2. 러우전쟁 이후 각국 대응 전략과 시사점

대응 전략

■ EU

- 러시아 에너지존 감축을 위한 중 단기 종합대책 발표(REPowerEU)
- 세부전략 : 에너지소비구조 개선(가스 소비량 자발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가스 수입선 다변화, 바이오가스 개발 및 보급 촉진, 산업 부문 탈탄소화,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확대
- EU는 G7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원유, 가스, 석유제품 대상 가격 상한제 도입, 초과수익 과세 및 활용 등. 회원국별 재정지원 정책 실시

■ 독일

-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대응하기 위해 해상 LNG 터미널 긴급 신설
- 가스, 전기 가격상한 제도 도입
- 일부 발전소 재가동 허용(석탄 퇴출 일정 예외 적용)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재생에너지 부담금 폐지
- 월 9유로 대중교통 이용권 및 유류세 감면

■ 프랑스

- 전력공사(EDF) 국유화 및 에너지절약 계획 제시
-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기세금 인하. 유류세 인하
- 에너지요금 인상을 제한. 에너지기업에 초과이윤세 부과
- 가스보일러에서 히트펌프 전환 지원

■ 일본

- S+3E 2022년 LNG 비용의 상승은 일본 도매 전력 시장과 소매 요금에 즉각 반영(10대 전력회사 중 9개가 순손실 기록)
- LNG 조달 리스크를 확인 후 효율향상·원전 재가동·재생에너지 확대 병행

2. 러우전쟁 이후 각국 대응 전략과 시사점

대응 전략

표 2-7.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류

구분	독일	프랑스	영국
요금 지원	- 일회성 보조금 지원 (연금수령자, 근로소득자 등) - 난방비 보조금 지급 - 대중교통 월간이용권 가격 인하 - 천연가스 및 지역난방 소비자 대상 1개월 에너지 요금 공제	- 기존 에너지 바우처 수령자 보조금(100유로) - 저소득층 특별 보조금 (100~200유로) - 저소득층 연료지원금 (100유로)	- 대체연료 가구 지원금 인상(200유로) - 저소득·연금수령·장애인 가구 보조금 지원 (150~900파운드) - 에너지 요금 할인 (400파운드)
세금·부담금 감면	- 유류세 인하(14~30c/L) - 전기료에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 폐지 - 부가가치세 인하(7%) - 탄소세 인상 1년 유예	- 최종전기소비세 인하 (가게 1유로/MWh) - 유류세 인하(18~30c/L)	- 환경추가부담금 부과 중단
가격 규제	- 전기, 가스요금 상한제 시행	- 전력 가격 인상을 제한 - 가스 가격 인상을 제한	- 가계 에너지 단위요금 할인 - 산업 에너지 단위요금 할인 (에너지 요금 완화 정책, 에너지 요금 할인 정책)
산업 지원	- 피해가 큰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에너지 회사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	- 화물 수송업자 보조금 (총 4억 유로) - 최종전기소비세 인하 (기업 0.5 유로/MWh) - 원자력에너지규제접근 (ARENH) 확대 - 에너지 집약기업 보조금 지급	- 에너지 다소비 업종 기업 지원책 발표

자료 : 김유정 임유진,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표 6 국가별 에너지 위기 대응 교통 지원 정책 비교

구분	유류세·가격 인하 조치		종료 후 조치
	인하 기간	인하 폭	
프랑스	2022년 4월~12월 (9개월)	휘발유 10~30센트/L (약 136원~407원/L)	소득 하위 50% 저소득 근로 가구 대상 출퇴근 유류 보조수당 한시적 지원 도입
뉴질랜드	2022년 3월~2023년 3월 (13개월)	휘발유 25센트/L (약 205원/L)	저소득층,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50% 영구 할인 정책 도입
독일	2022년 6월~2022년 8월 (3개월)	휘발유 29.5센트/L (약 400원/L) 경유 14센트/L (약 190원/L)	인하 종료 후 정상화
우리나라	2021년 11월~현재 (50개월)	휘발유 약 57원~304원/L 경유 약 58원~215원/L	-

자료 : 임현지 외, 2025,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실태II: 문제 진단과 대안

2. 러우전쟁 이후 각국 대응 전략과 시사점

대응 전략 종합

■ 에너지 비용 절감 유도

- 가격통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상한선 설정
- 에너지 세금 감면

■ 적극적 수요 감축 및 효율 개선

- 대중교통 사용 유도, 에너지 절약 정책

■ 에너지원 다각화 및 공급구조 다변화

- 가스조달 다변화
- 석탄발전소 가동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 및 난방 에너지 전환(히트펌프 등)

시사점

■ 에너지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 취약계층 선별 지원 필요

- 취약계층 및 취약산업에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
- 가스공급 다변화 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 낮추어야 함
-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필요(구조개혁)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수요대책 집중

-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ex:모터시스템, EnMS, 공정열)
- 실질적 수요대책(자가용→대중교통)

■ 전기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 수송 전기차, 난방 히트펌프 등 전기화(산업도 전기화 노력 필요)
- 재생에너지 발전은 화석연료 수입비용 완화(중국, 유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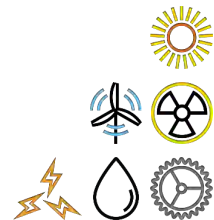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2026.4.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이현석 (greenred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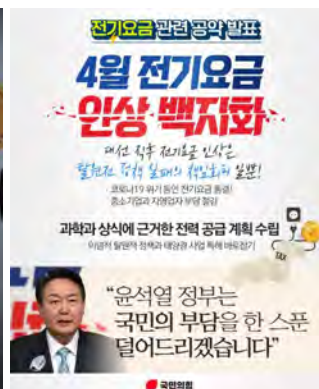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방비 대란

2

전기요금·탈원전 공방만 있었던 2022년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치 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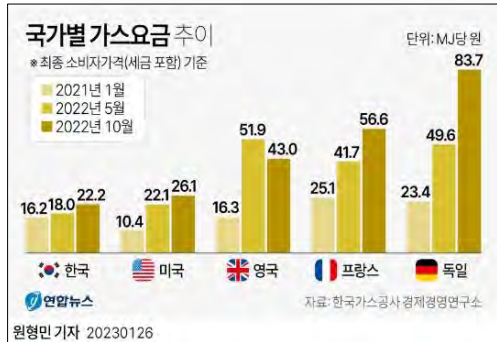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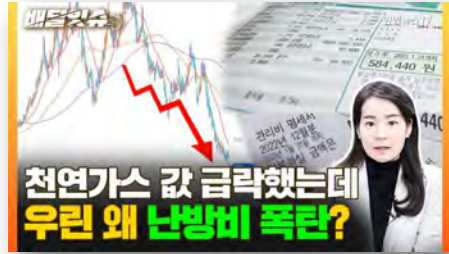
-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2022.2.15~3.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2.24)
- 러시아 침공 이전부터 국제유가가 높은 상태(브렌트유 기준 95달러)였으나, 침공 이후 급등 한때 140 달러 근접(3.6)
- 두바이유는 같은 기간 계속 100 달러 이상 기록
-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둔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탈원전 반대’,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주장
-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정치 공방(탈원전 공방)만 있었을 뿐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탈화석연료에 대한 정치적 의제 형성은 되지 못함.



2023년 2월, 뒤늦게 찾아온 ‘도시가스 대란’

기본 팩트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난방비 폭탄” 정치 공방 계속

- 2022년 여름, 민수용 도매요금 인상 억제하고, 산업용·상업용만 인상 (원료비 연동제로 2023년 1월 상업용·산업용 도매가격 인하. 주택용·영업용은 연료비 연동제 미적용)
- 주택용은 10월에 18.4원/MJ 으로 인상되었으나, 하절기 가스 사용량 적어 사회적 영향 없음
-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흑한으로 가스 사용량 급증.
- 설 연휴가 지나고 ‘도시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은 이들의 민원 급증. 언론 보도 이후 정치 쟁점화
- 다른 국가에 비해 가스요금 급등 폭 적음. 그러나 적자(미수금) 누적
- 에너지 위기 ‘시그널’을 주지 않은 채, 대책도 없이 요금 고지서를 받고 정치 쟁점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정책 (2023.2.)

바우처만 늘리는 저소득층 에너지 대책

- 뒤늦은 대책 & 혼란 자초
- 가스요금 인상은 2021년 10월.
- 그러나 요금 고지서가 나온 이후 대책 마련
- 1/26 1차 대책(바우처 확대) 이후 2/1 추가 대책 (차상위 계층) 발표
- 저소득층, 가정용, 도시 가스에 국한된 대책
- 해외와 달리 취약계층 이외 계층, 중소기업 등 대책 없음
- 차상위계층은 ‘가스비 할인’ : 등유, LPG, 지역난방 등 고려 없음. 농어촌 지역은 논의에서 소외.
- 지역난방 ‘페이백 보도’ 있었으나, 산업부가 공식 부인. 지역난방공 사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중.(34개 지역난방업체 중 30곳이 민간 업체)
-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신청주의 문제)
- 사업자에 지원하는 해외와 달리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안됨
- 기존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근본적인 해법 없이 ‘연락과 홍보를 열심히’에 집중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 59만 2000원까지 지원!

	기존 할인 (가스요금)	추가 할인 (가스요금)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4만 4000원	44만 8000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8000원	30만 4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4만 4000원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	7만 2000원	52만원

2023.1.26 ~ 2023.2.28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구분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
지원방식	요금할인	요금할인	요금할인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차등 적용	지역별 차등 적용	지역별 차등 적용
지원 대상 기간	최대 592,000원	최대 592,000원	최대 592,000원
신청시기	23.12~23.2월	4월~5월	4월~5월
접수처	상시	지역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시기	지역별 신청일	지역별 신청일	지역별 신청일
지원사할 안내	지역별 도시가스사 연락처(별첨)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	집단지에너지협회 홈페이지 (http://www.lchca.co.kr)

늘어나는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증가

단기적 요금 지원 정책에서 단열과 주거 지원 등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 필요

- 에너지 바우처 발급률은 매년 90% 이상
 - 2021년 : 93.4%, 2022년 97.8%, 2023년 96.8%
-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
 - 2021년 17.1% → 2023년 38.6%
- 특히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미사용률은 2023년 74.7%
-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주의 문제 극복해야 하지만,
 - 사용률·신청 범위 확대, 단기적 요금 지원이 아니라 단열과 주거 지원 등 중장기 지원 정책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

에너지 바우처 신청 현황(단위 : 천 세대, 백만원)

년도	발급세대	발급액
2020	661	75,058
2021	777	97,267
2022	1,133	400,148
2023	1,225	436,409
2024	1,258	485,600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뉴시스 경제 > 경제일반

있어도 못쓰는 취약층 에너지바우처...5년간 미사용률 2배 ↑

원문: 2024.10.14 10:58:04 | 수정: 2024.10.14 10:58:19

<에너지바우처 현황>

구분	발급액	미사용액	미사용률
2019년	69,906	12,102	17.3
2020년	75,058	11,855	15.8
2021년	97,267	16,676	17.1
2022년	400,153	134,387	33.6
2023년	436,410	168,369	38.6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오세훈 특별실 내구실

<노인&장애인 미사용률 현황>

구분	전체 미사용액 (A)	세대특성별 미사용액			노인&장애인 미사용률 (B+C)/A
		노인(B)	장애인(C)	기타**	
2019년	12,102	4,981	5,442	1,679	86.1
2020년	11,855	4,405	5,039	2,411	79.7
2021년	16,676	6,903	6,558	3,215	80.1
2022년	134,387	54,234	44,328	35,825	73.3
2023년	168,369	72,560	53,191	42,618	74.7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오세훈 특별실 내구실

**기타 : 영유아, 영장부, 장애인, 원주민, 수당수녀

한전은 흑자 전환되었지만, 부채는 그대로

국제유가 하강국면에서 '버퍼'를 만들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

- 연료비 인상에도 전기요금 동결, 한국전력 부채 확대 : 2021년 145.8조원 → 2022년 192.8조원
- 2022년 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5배(간접시 6배)로 확대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2024년(8.4조원)과 2025년(13.5조원) 영업이익 흑자 기록
- 그러나 한국전력의 부채는 2022년 192.8조원에서 2025년 205.7조원으로 증가
- 2027년 사채 발행한도 일시 확대 일몰
- 국제유가 상승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전력의 부채 비중 확대는 더욱 심화될 것
- 국제유가 하강 국면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버퍼'를 없앤 형국
-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망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 여력까지 부족한 상황. '송전망 국민 펀드' 추진 중

< '25년 연결 요약 손익계산서 >

구분	'24년	'25년	증감	%
매출액	933,989	974,345	40,356	4.3
▷ 전기판매수익	888,898	930,046	41,148	4.6
▷ 기타매출	45,091	44,299	△792	△1.8
영업비용	850,342	839,097	△11,245	△1.3
▷ 연료비	225,378	194,364	△31,014	△13.8
▷ 구입전력비	346,599	340,527	△6,072	△1.8
▷ 기타영업비용	278,365	304,206	25,841	9.3
영업이익	83,647	135,248	51,601	61.7
영업외손익 등	△47,427	△47,876	△449	△0.9
▷ 이차비용	46,651	43,395	△3,256	△7.0
당기순이익	36,220	87,372	51,152	141.2

(상기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206조원의 부채와 130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이 남아있어, 하루 이차비용으로만 119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결기준 부채, 차입금, 이차비용 추이 >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잠정)
부채	145.8	192.8	202.5	205.4	205.7
차입금	80.5	120.6	133.6	132.5	129.8
이차비용 (하위미각, 억원)	1.9 (52)	2.8 (77)	4.5 (122)	4.7 (128)	4.3 (119)

출처 :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한전, '25년 결산실적(잠정) 발표」, 2025.2.26.

14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 미수금

국제유가는 내렸지만, 가스공사 미수금은 그대로

- 한국가스공사는 한전과 달리 적자가 아니라, 미수금 형태로 연료비 차액을 계상
- 2021년 2.9조원이던 미수금이 2023년 15.8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
- 2022년 가스공사도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늘림(기한 제한 없음)
- 2025년 말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14.1조원으로 약간 줄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계속 상승
- 겨울철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함께 미수금 문제 다시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반성과 교훈, 대비책도 없이 보낸 몇 년

국제 유가 불안정은 예상되었던 국면, 하지만 대비책 없이 몇 년을 허송세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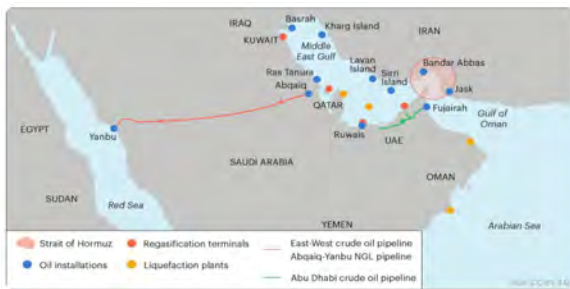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고유가 상태 지속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실제 고유가 상태는 9개월 정도 지속. 이후 국제 유가는 이전 상태로 돌아감
- 특히 유럽 국가들은 2022년 여름, 겨울철 난방용 천연가스 대란을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 하지만, 한국은 탈원전 논쟁에 빠져 별다른 준비 없음. 이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문제 인식 → 또다시 정쟁화
-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에 공기업(한전, 가스공사)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대비 없음
- 에너지 전환 등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준비는 물론, 두번째 유가 폭등에 공기업 ‘버퍼’ 역할은 축소된 상황
- 정치권은 유가 폭등에 맞춰 매번 ‘에너지 빈곤층’을 언급하지만, 에너지복지법이나 관련 통계 없이 바꾸쳐 증액만 반복



미국-이란 전쟁, “역사상 최대 에너지 안보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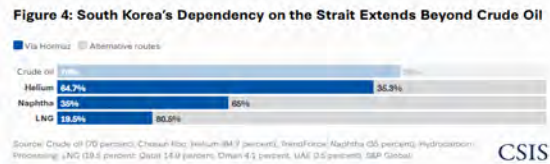
-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2026.3.20. FT 인터뷰)
 - “2022년 유럽이 러시아로 부터 공급 받지 못한 가스 량의 2배”
 - “1970년대 두차례 오일 쇼크 당시보다 많은 석유 공급 문제”
- 미국-이란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매일 2,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통과 : 원유+초경질유(Condensate) 1,400만 배럴 / 석유제품 600만 배럴 규모
- 호르무즈 해협 우회 통로로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과 UAE ‘합산-푸자이라 송유관(ADCOP)’ 운영 중
 - 동서 파이프라인 : 77만 배럴(2026년 1,2월 평균) → 290만 배럴(전쟁 이후, 최대 700만 배럴 가능)
 - 합산-푸자이라 송유관 : 110만 배럴(2026년 2월) → 162만 배럴(2026년 3월, 최대 180만 배럴 가능)
- 국내 원유 수입의 70%, 나프타 35%, LNG 19.5%이 영향.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헬륨 64.7%

페르시아만 석유 시설과 대체 송유관



Source : IEA, 「Strait of Hormuz Factsheet」, 20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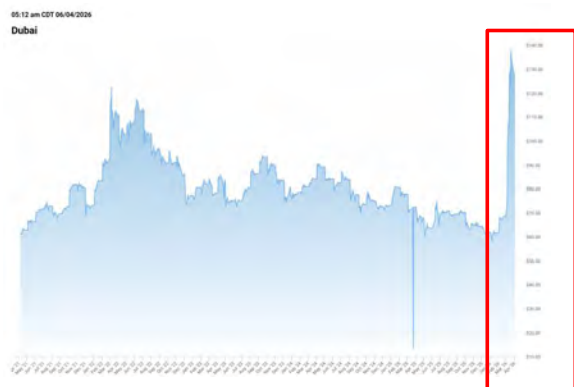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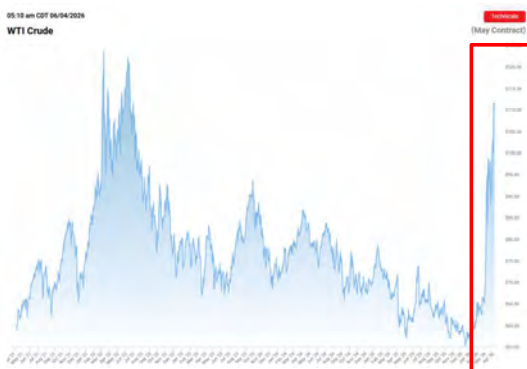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원유·헬륨·나프타·LNG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Source : CSIS, 「The Impact of the Iran Conflict on South Korea: By the Numbers」, 2026.2.

또 다시 시작된 국제 유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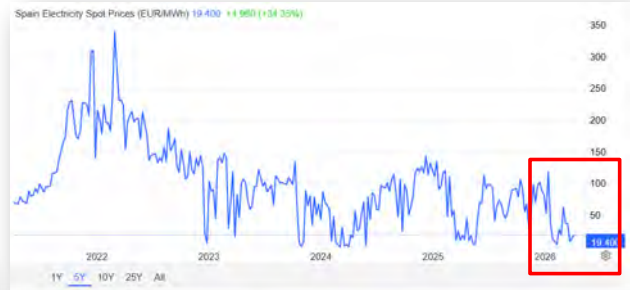
- 2022년보다 더욱 가파른 국제 유가 급등
- 특히 국내 유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바이산 원유 가격 급등이 2022년 보다 더욱 심각
- 4월 6일, 미국-이란 일단 45일 휴전 후 종전 논의 진행
- 이후 종전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별도 문제 가능성
- 또한 미국,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시설 파괴 시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유가 상태 지속 가능성
- 2021년 요소수 사태보다 광범위한 석유 제품 원자재 수급 대란 이미 발생 중
- 2022년 사례를 볼 때, 올해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논쟁으로 비화 가능성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와 전기요금

태양광이 급증한 스페인 사례

- 스페인 태양광 발전 비중 2020년 8% → 2025년 21.8%로 급증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기요금 급등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전기요금 감소세
-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전기요금 유지
- 2026년 3월 미국-이란 전쟁 개시와 함께 한때 전기요금 올랐으나, 이후 감소세
- 전력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전기요금 책정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국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큰 역할



재생에너지 늘린 나라들, 에너지쇼크에도 여유

A 조만영 기자 | 승인 2026.03.27 12:04

스페인과 포르투갈 수주권 전력가격 하락
파키스탄 지붕태양광, 중국은 전기차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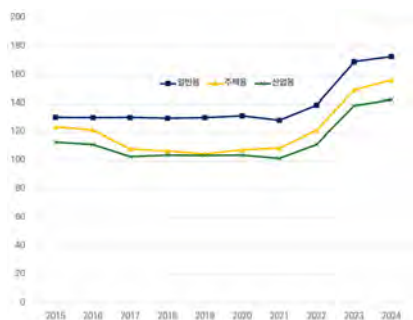
Source : TradingEconomics.com

2021년 이후 꾸준히 오른 전기요금

아직 국제유가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2017~2021년까지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부 인하
- 그러나 러-우 전쟁영향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요금제 특성에 따라 각종 할인 혜택 존재. 주택용 동결/산업용 인상 방침 지속.
 - 그러나 할인 혜택도 많아. 용도별 전기요금 총액은 계속 증가
-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인하 요인이 있더라도 연료비 조정 단가를 계속 +5원/kWh 로 유지
- 3개월 단위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아직 국제유가 상승 미반영
- 향후 전기요금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것

우리나라의 용도별 전기요금 추이(2015~2024, 단위 : 원/kWh)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25년 한국전력통계', 2025.5.

2026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구분	2025년 12월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석유연료비	112.50	112.50	112.50	112.50	112.50	112.50	112.50
천연가스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원유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중유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3.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① 기준연료비를 분할 및 조정 조정할 경우 미조정분을 차감한 기준연료비를 적용

기준연료비: 685.04 원/kg
 기준연료비 분할 차감조정 차감: -194.07 원/kg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23.5월 기준): 490.97 원/kg

② 실제연료비에서 ①의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연료비에 실제 연료비수율 곱하여 조정단가 산정

연료비 조정단가 = (실제연료비) -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 (연료비) / (연료비수율)

연료비 조정단가 = 410.85 원/kg - 490.97 원/kg = -80.12 원/kg

연료비 조정단가 = -80.12 원/kg × 0.1335 kg/kWh = -10.7 원/kWh

③ 조정단가가 +5원/kWh 초과 시 상한선 +5원/kWh 적용

④ 단, 차감 조정수기 대비 조정폭이 1원/kWh 미만일 경우 차감 조정수기의 단가를 적용

(상한선 적용단가) = -5.0 원/kWh
 (연료비 조정단가) = -5.0 원/kWh

4. 최종 연료비조정단가

전기요금약관 별표 연료비조정요율 운영지침 2.4에 의거, '26년 4월부터 6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5.0원/kWh를 적용하기로 함

또다시 반복된 화석연료 지원 정책 확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026.3.26, 관련부처 합동)

1.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수급관리 강화 및 외국인 에너지 절약 실천** 등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공요금-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1)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으로 유가 상승에 적극 대응

① **(최고가격제 유류세) 국민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상승폭 최소화

→ 유류세 조정원칙: **유가상승적 일부 완화, 탄력적 조정, 정유가격 상승폭 최소화** 반영

- 휘발유(△7~△15%), 경유(△10~△25%) 유류세 인하 확대(3.27~5.31)
- * 기존 대비 추가 인하폭(원): (휘발유)△65(763→698), (경유)△87(623→536)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3.31일) → 26.3.27일부터 소급 적용
-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추가 적용

▶ **(최고가격, 유류세 인하) 물가안정 직접효과가 있고 신속대응 가능하나, 에너지 수요 관리에 역할하고 취약가구 보호 재정부담 측면 비효율**

→ (보조금) 취약가구 직접지원 가능, 가격예고 알고(에너지수요 관리) 재정부담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물가안정 직접효과가 낮고 신속성 떨어짐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유류세 보조금
○ 휘발유(원) ○ 경유(원) ○ LPG(원) ○ 도시가스(원) ○ 전기요금(원) ○ 수도요금(원) ○ 열요금(원) ○ 공공요금(원) ○ 주택임대차임금(원) ○ 국민연금(원) ○ 건강보험료(원) ○ 자동차세(원) ○ 재산세(원) ○ 주민세(원) ○ 지방소득세(원) ○ 소득세(원) ○ 법인세(원) ○ 상속세(원) ○ 증여세(원) ○ 관세(원) ○ 기타(원)	○ 휘발유(원) ○ 경유(원) ○ LPG(원) ○ 도시가스(원) ○ 전기요금(원) ○ 수도요금(원) ○ 열요금(원) ○ 공공요금(원) ○ 주택임대차임금(원) ○ 국민연금(원) ○ 건강보험료(원) ○ 자동차세(원) ○ 재산세(원) ○ 주민세(원) ○ 지방소득세(원) ○ 소득세(원) ○ 법인세(원) ○ 상속세(원) ○ 증여세(원) ○ 관세(원) ○ 기타(원)	○ 휘발유(원) ○ 경유(원) ○ LPG(원) ○ 도시가스(원) ○ 전기요금(원) ○ 수도요금(원) ○ 열요금(원) ○ 공공요금(원) ○ 주택임대차임금(원) ○ 국민연금(원) ○ 건강보험료(원) ○ 자동차세(원) ○ 재산세(원) ○ 주민세(원) ○ 지방소득세(원) ○ 소득세(원) ○ 법인세(원) ○ 상속세(원) ○ 증여세(원) ○ 관세(원) ○ 기타(원)

② **(유기연동보조금)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기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 까지 한시상향(50~70%), 필요시 연장 검토

- 고유가 지속 시 화물·버스 대상 유기연동보조금 추가지급 근거(하물 사용차별 등) 개정을 마련하고, 시도별 예산 수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행
- * 유가 1,700원/리터 상회분의 70%를 지원하는 보조금(현재 지급한도 155원/리터, 경유가리터 1,361원 상회시 지급한도 도달 → 추가 보조금 지급 위해 법 개정 필요)

③ **(일몰주유소) 정유사의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가격 변동폭 전수조사(총 1,318개소) 등 관리 강화

- * 고가 판매 주유소 대상 원스트리밍과 맞먹게 적용, 고가 판매지역 중심 신규모집(26.3) 등

④ **(시장 점검) 정유사 담합혐의 조사를 신속 진행**하고 최고가격 변동 전후 기간 중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 시행

- 「석유사업법(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이후 첫 시행
- 1997년까지는 정부 가격 고시제 운영. 이후 가격자유화
- 이후 정유사에 손실보전을 할 예정
- 유류세 인하 정책 확대
 -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수차례 인하
 - 유류세 인하의 소득 역진성 수차례 지적 있었으나 일괄 적용
 - 결국 자가용 운전자에게 집중된 혜택
 - 유류세 10% 인하시 휘발유 가격 82원 인하. 연간 세수 1.8조원 감소
 - 세수 감소분이 그대로 화석연료 지원금 형태로 나가는 문제
 - 비상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화물과 버스에 대한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대중교통 지원 방향으로 정책 방향 전환 필요
- 두가지 정책 모두 국민 전체의 화석연료 사용을 무차별적으로 증진하는 방향.
- 특히 정부도 인정하듯이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에 '역행'. 취약가구 보호·재정부담 측면에서 비효율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유류세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026.3.26, 관련부처 합동)

참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

□ (세율조정)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하고(4월 → 5월 종료), 그 인하폭도 확대

- 현행 유류세 인하폭 대비 추가 인하폭(VAT 10% 포함)
 - 휘발유 △65원/ℓ, 경유 △87원/ℓ

유종	연월	인하율	인하율	인하율	인하율	인하율	인하율	인하율	인하율
휘발유	21.11.12	22.5.1	22.7.1	23.1.1	24.7.1	24.11.1	25.5.1	25.11.1	26.3.27
	22.4.30	6.30	12.31	24.6.30	10.31	25.4.30	10.31	26.3.20	26.5.31
경유	21.11.12	22.5.1	22.7.1	23.1.1	24.7.1	24.11.1	25.5.1	25.11.1	26.3.27
	22.4.30	6.30	12.31	24.6.30	10.31	25.4.30	10.31	26.3.20	26.5.31

□ (적용기간) '26.3.27일 0시(2차 최고가격제 적용 시점) - '26.5.31일

□ (영우계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26.3.31일) 등을 거쳐 공포일(26.4.1일 예정)부터 시행하되,

- '26.3.27~공포일 전일(3.31일 예정) 반출·수입신고분에도 유류세 추가 인하 소급 적용
- 유류세 추가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공제

□ (기대효과) 최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유류세 인하를 통해 완화

-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폭 적용

- 유류세 인하는 결국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
-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
 - 1분위(경상소득 1,802만원) : 1.5만원 세금 부담 완화
 - 10분위(경상소득 7,253만원) 15.8만원 세금 부담 완화
- 대중교통·경차·화물차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서민을 위한 유류세 인하' 논리 반복. 진보 진영 내부에서 조차 합의되지 못하는 문제
- 수년째 요율만 달리해서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 진행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 부담완화 수준(2018년과)> (단위: 만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경상소득(A)	1,802	2,748	3,266	3,609	4,047	4,427	4,802	5,267	5,690	7,253
인하전(B)	10.2	12.9	24.5	33.7	48.8	53.1	66.1	71.1	87.7	105.7
	8.7	11.0	20.8	28.6	41.5	45.1	56.1	60.5	74.5	89.8
변동(D=B-C)	1.5	1.9	3.7	5.1	7.3	8.0	9.9	10.7	13.2	15.8
소득대비 세부담 완화수준(D/A)	0.08	0.07	0.11	0.14	0.18	0.18	0.21	0.20	0.23	0.22

자료: 통계청, 201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세제 현황과 정책별 효과분석』, 2019

핵발전소 가동률 향상? 에너지 절약 어때?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026.3.26, 관련부처 합동)

②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① (공급 확대) UAE 원유 2,400만 배럴 등 대체수입선 확보노력 강화, 국제공동비축 원유 우선구매권 행사 등 철저 관리

- * 산유국 등 해외기업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류비축시설에 유치하고 비축시 우선구매권 행사
- 자원위기 경보단계 "경제" 격상 검토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협의에 따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이행 준비
- * IEA 공동비축결의(31일)를 통해 32개 회원국 연장일자로 결정, 90일간 비축유 방출
- LNG 스왑, 원유시 환율 구매 등 카타르산 LNG 대체물량 확보
- * 가스공사와 유 에너지기업(ERA) 간 LNG 스왑 관련 업무협약서 등 체결(21일)

② (수요 관리) 에너지 비상대응반(기후부) 가동해 일일 점검·대응

- 전기 재가동 등 통해 원전 가동률 80% 이상*으로 계고(0~ 20%대), 석탄발전 상한제약(80%)* 해제* 및 석탄발전소(2기)* 폐지시기 연장
- * 원전 중 26기 중 16기 가동 중 - 6월초까지 정비완료 추가 5기 재가동 추진
- ** 계통관제에 의해, 최대 석탄발전 설비용량의 80%로 상한 제한(15~20% → 31일부 일시해제)
- 열량조절설비* 기능 및 LNG 발전 최소화 등 수요관리 실시
- * 허용 열량 범위 내에서 LPG를 혼입하여 LNG 물량에 2천톤/시간 대체(26.7톤/시간)
- "1가구 1배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추진 및 근본적 에너지 안보 강화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

③ (에너지 절약) 수급 관리와 함께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 병행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 및 지역별 인센티브* 추진
- * 요일제 참여 시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 검토 및 공공-대기업 서차출퇴근, LNG발전 급중시간대(17~20시)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 확산
-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절감계획* 수립토록 하고 목표달성 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유자 우선지원 등 혜택 부여
- *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사업장이 전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장(158개) 사용량의 91.4%를 차지
- ** (주요내용)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불요불급설비 가동제한, 절약시설 투자 조기시행 등

- 우리나라 하루 수입 원유량 282만 배럴(1년 기준 10억 배럴)
- 새로 확보한 UAE 2,400만 배럴 8.5일치 분량.
- 다급한 상황에서 2,400만 배럴은 소중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님
- 현실적으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중장기적인 대책 함께 병행 필요
- 핵발전소 가동률 80% 이상, 석탄발전 상한제약 해제·석탄화력보라 전소 폐기 시기 연장은 또다른 문제로 연결
- 3-4월 실질적 검토해야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되기 어려워
- 에너지 절약 대책 역시, 1970년대식 '어깨띠 + 유인물 살포' 국민 공감대 어려워. 감점 호소가 아니라, 수요관리 시스템 접근 필요



안전 문제보다 전력수급이 먼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026.3.26, 관련부처 합동)



- 월성 2~4호기는 작년 7~9월부터 계획 예방정비 중
 - 월성 2호기: 2025.9.1~
 - 월성 3호기: 2025.9.26~
 - 월성 4호기: 2025.7.18~
- 보통 계획예방정비는 2~4개월 정도로 진행. 그러나 현재까지 모두 재가동하지 못함.
-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설계 수명 만료. 나머지 발전소도 2029년까지 설계 만료.(3호기 2027년 12월, 4호기 2029년 2월)
- 핵발전소 배관 받침대(지지대) 일부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 발견. 배관 받침대는 핵발전소 별로 4,000~6,000개씩 모두 19,000여개
- 월성 2호기 기술기준 부적합 받침대 발견. 이후 전체 조사 진행 중. 3월초 기준 전체 중 75%에 대해서만 조사 완료.
- 지역 환경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 공개.
- 전수조사 및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배관 지지대 재시공, 안전성 검토 등 필요.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은 이후 안전에 심각한 문제. 제대로 된 검증과 자료 공개 필요

10여 년째 제자리 걸음인 석유 의존도

석유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재앙은 반복된다

-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1995년 60.3% → 2010년 39.4%로 지속적으로 감소
- 2016년 40.1% 기록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 여전히 37.6%
- 원유 수입량도 2019년과 2020년 대폭 줄어들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중동 의존도 역시, 여전히 70%대 유지. 지정학적 한계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상황
- 기후위기-탄소중립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실제 탈화석연료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수십 년째 문제 지속

우리나라의 석유 의존도(1990-2024,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인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량 및 중동의존도(2000-2024)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25)', 2026.3.

국민주권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2026.4.6.)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 20% 이상, 녹색제조 글로벌 3강 도약,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3대 목표 10대 과제
 -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 포함되었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계획, 2030년 신차 중 전기차·수소차 40% 정책 유지
 - 2026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연기 발표에도 선거 공약이었던 2040년 탈석탄 계획 유지
- 새로운 목표가 발표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목표 재확인. 그럼에도 후퇴하지 않는 목표 재확인 의미는 있음
- 결국 조만간 발표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하반기 발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신규 핵발전소 건설·송전선로 문제 등 언급되지 않은 다른 쟁점이 전쟁 국면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2 에너지 대전환 정책목표 및 과제

□ 3대 정책목표 10대 과제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전기혁명 선도

<에너지 대전환 3대 목표, 10대 과제>

1 재생e 발전비중 2030년 20% 이상 달성	2 녹색 제조 글로벌 3강 도약	3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e 100GW 보급 • 40 석탄발전 폐지 추진 • 열e의 재생열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 생태계 육성 • 산업부문 전기화, 연원료 청정화 •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 • 금융·재정 지원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전력망 양방향 분산형 구조로 혁신 • 요금·시장제도 개편 • 모두의 에너지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30년까지 ①재생e 비중 대폭 확대(9~20% 이상) 및 ①1차 중화석연료 비중 획기적 축소(80%~66%), ②전기화 비율 30% 달성(22%~30%)

□ (향후계획) 에너지 대전환 전략에 따라 재생e 확대, 전력 므스, 재생열 전환, 석탄발전 전환, 녹색산업 육성 등 **우속전략 발표 및 이행**

- 4월: ①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②에너지 혁신 전략
- 6월: ③녹색대전환(K-GX) 전략
- 하반기: ④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⑤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소결 : 50여 년째 반복된 악몽

반복되는 석유·에너지 위기, 이제는 단절이 필요하다

- 1970년대 2차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작. 또한 에너지 효율화, 절약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높아짐.
- 그로부터 50여년이 흐른 지금, 화석연료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몇 년에 한 번씩 비슷한 일을 겪었으며, 그동안 ‘녹색성장’, ‘탄소중립’ 같은 말이 유행하기도 함.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1970년대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기후위기의 시대, 결국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당위성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음
- 멀리 볼 것도 없이 불과 몇 년전이었던 2022년의 실패와 교훈도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자 에너지자를 아껴 쓰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1973.10>



▲ 석유 인상 소문이 나돌자 시민들은 석유가게 앞에 장사판을 세워놓고서 석유 배급이 없는 로스쿨만 나옴은 석유가게 앞은 굳게 닫혀 있다.



▲ 국가적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가차량 통행을 금지한 통행일대 <1973.10>

출처 : 경향신문 자료 사진

소결 : 2022년의 악몽을 다시 재연할 것인가?

에너지 위기가 기후재난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필요

- 2022년은 폭염과 혹한이 동시에 왔던 시기
- 기후위기로 날씨 예측이 쉽지 않으나, 최근 기상청의 여름철 중장기 예측은 계속 높은 기온 & 적은 강수량 유지
- 국제유가 상승 →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 요금 대란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 필요
-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해법의 구분 필요
- 소득역진적인 일률적 요금 지원 정책 일변도의 단기적 해법보다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 정책 필요
- 에너지 빈곤층 통계와 단열·연료전환·주거환경 개선 등 범 부처적인 지원 정책 필요
- 교통 정책의 경우, (캠페인이 아니라) 파격적 지원 & 교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 지원책 필요.
- 여름보다는 겨울철 기후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 기존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전면 개선 작업 & 혹한기 대책 마련 필요



감사합니다

《문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메일 : GreenReds@gmail.com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onseok>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reenreds>



토론

핵발전은 에너지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박수홍(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현 상황진단: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불과 몇 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는 다시 동일한 형태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 사건이 아님. 오히려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제 정치적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임. 특히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이 곧바로 전력 수급, 물가, 산업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 현재의 위기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외면해 온 결과. 즉 화석연료 기반 전력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봐야 함

0. 구조적 문제진단_화석연료 기반 전력시스템의 한계

-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소와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음. 이 구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1)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_원유, 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특정 해협의 봉쇄나 국제 분쟁이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짐.
- 2) 전력시스템의 경직성_중앙집중형 발전과 대규모 기저부하 중심의 시스템은 수요 변화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3) '화석연료 기반 전력시스템 -> 기후위기 유발 -> 기후재난, 지정학적 분쟁 심화, 전쟁'-> 에너지 위기사이클의 악순환. 화석연료 기반 전력시스템 한계에 다다랐고 더이상 유용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경고

0. 정부의 대응_단기적 수급 대응 위주에 매몰된 위험한 역주행

- 석탄발전 80% 상한제 해제, 폐쇄 예정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 검토, 정비 중 핵발전소의 조기 재가동 등 핵발전소 이용률 상향
- 단기적인 수급 대응이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 기후위기대응과 국민 안전을 후순위로 밀어냄.
- 국민행동지침 등 국민에게 불편과 절약을 호소, 그러나 핵산업계에는 '확대'를 허용하는 이중적 정책. 화석연료 시스템, 핵발전 기저부하 중심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효과.

0. 핵발전으로는 에너지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

- 무책임한 정부 정책: 정비 중인 핵발전소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위험. 정비 중인 핵발전소는 기계적 결함과 노후 부품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멈춘 설비임. 그럼에도 특정 시점을 못 박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 절차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킬 우려가 큼. 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이전에 가동 시점을 정부 부처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독립 규제기관의 권한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 기술적 경합성: 핵발전은 일정한 출력으로 운전되는 기저부하 전원으로 설계되어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와 동시에 확대될 경우 전력계통의 불균형과 과잉 공급 문제를 초래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탄력운전’은 원자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위험한 방식임.
- 정책적 경합: 정책 자원과 제도 설계를 재생에너지로부터 빼앗는 구조. 막대한 재정 투자, 송전망 계획, 입지 정책, 전력시장 설계 등은 모두 한정된 정책 자원이며, 핵발전 중심 정책은 이 자원을 장기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음 그 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와 제도 개선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지연될 수 밖에 없음.
- 안보 및 위험성: 핵발전소는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서 매우 취약한 시설임.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될 것.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선택임.
- 성장 중심 경제 전략과 결함: AI,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전력 다소비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전제되는 한, 에너지 정책 역시 그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 에너지 수요관리, 구조적 전환은 밀려나고 공급확대 중심 정책의 반복, 핵발전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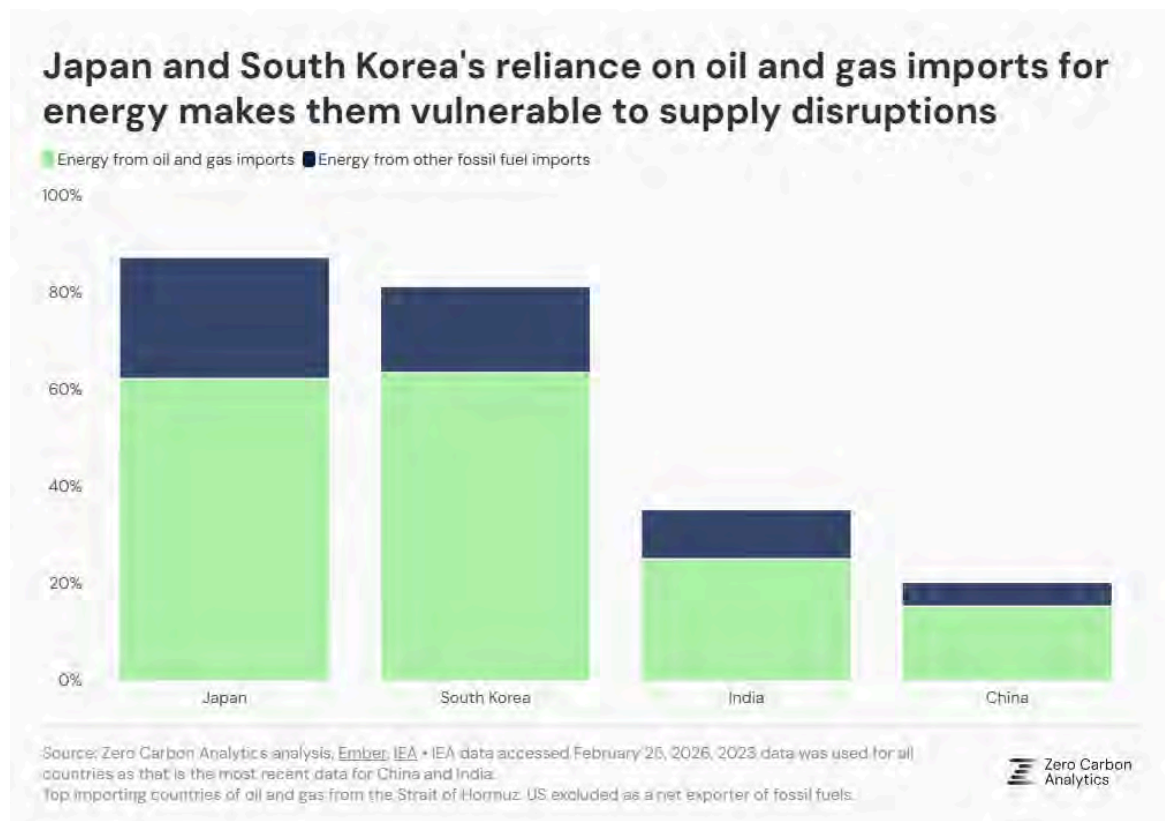
석탄과 가스를 넘어, 위기를 전환의 출발점으로

그린피스 / Korea Beyond Fossil Fuels(KBF)

양언호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들어가며: 반복되는 위기가 드러낸 구조적 취약성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와 LNG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싱크탱크 Zero Carbon Analytics 분석에 따르면, 그 흐름이 막혔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로 한국은 일본(87%)에 이어 세계 2위다. 한국의 1차 에너지 수요 중 81%가 화석연료 수입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 취약성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원(약 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10조 1000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직접 투입된다. 관공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1990년대 이후 폐지했던 유류가격 상한제를 30년 만에 재도입했다.

LNG 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데,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0달러 대에서 현재 110달러대로 오른 상태이며, 이란의 해협 봉쇄 등을 통해 고유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우 전쟁 때도 같았다. 유가 상승 여파로 2022년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96원까지 치솟는 동안 한전의 평균 판매단가는 120원에 묶였고, 그 해에만 약 33조 원의 적자를 냈다. 현재 한전 부채는 206조원이며, 가스공사 역시 민수용 미수금이 약 14조원에 이른다.

그때 정부와 업계는 ‘에너지 안보’를 명목으로 이미 이용률이 저조한 터미널을 두고도 11조원 규모의 신규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면서 화석연료 의존을 더 깊게 파는 것으로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형태가 달라졌다. ‘터미널을 짓자’ 대신 ‘미국산 LNG를 더 사자, 루이지애나 주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에 참여하자’는 논리가 등장했다. 중동 의존에서 미국 의존으로 대상만 바뀐 것이다. 화석연료 의존의 구조는 그대로다.

공급선을 미국이나 호주로 바꾸면 물리적 단절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LNG 가격은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수입선을 미국이나 호주로 바꾸더라도 국제 가격 충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단기 과제: 위기 대응과 기후 목표의 균형

① 석탄발전 상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로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라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된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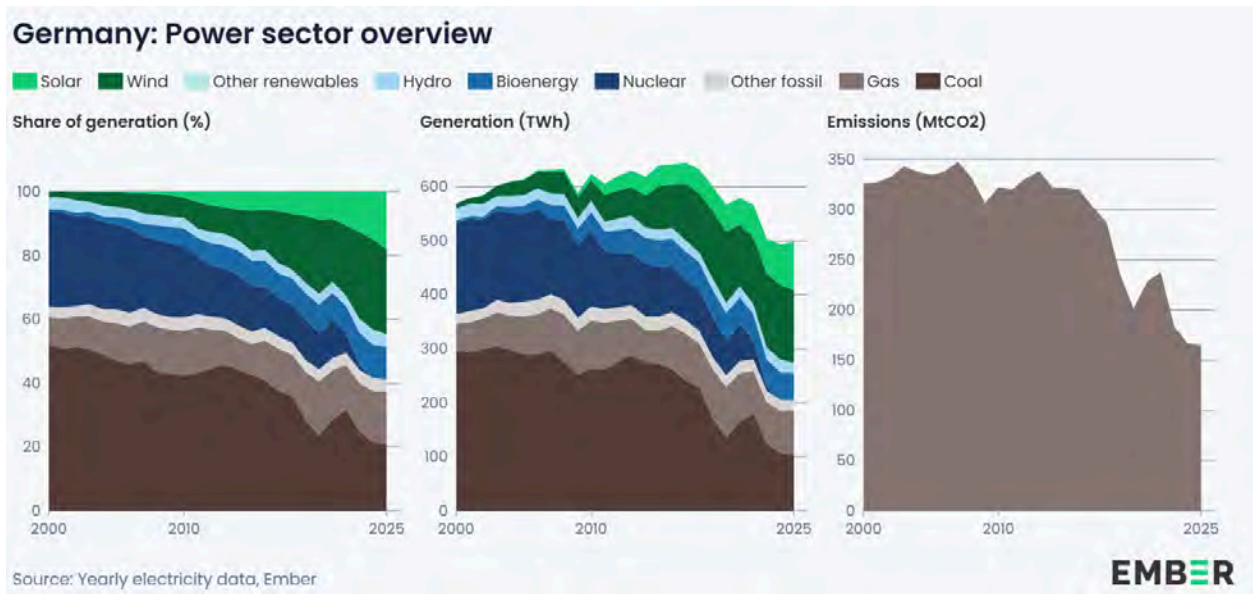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탈석탄 일정의 사실상 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유럽의 선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2023년 런던정경대 로버트 팔크너 국제관계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러·우 전쟁 직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거나 수명을 연장했지만, 그 용량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았고 석탄 발전은 2022년 연말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 조치는 비상 조치답게, 명확한 종료 시점과 함께 설정돼야 한다. COP30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탈석탄 약속이 비상 조치라는 이름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② 위기가 LNG 인프라 확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두고,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시장에 있어 최선의 시나리오조차 재앙적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고유가는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해제하더라도 전 세계 석유·가스 시장은 수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가 유지되며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타르에너지의 불가항력 선언은 LNG 장기 계약과 인프라 투자가 극단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더 많은 터미널, 더 많은 장기계약은 좌초자산 위험을 키우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입돼야 할 자본을 막는다. 러·우 전쟁 직후 독일 정부는 FSRU(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선박을 긴급 임차해 빌헬름스하펜, 브룬스뷔텔, 루브민, 뮤크란 4곳에 LNG 터미널을 속속 가동했다. 그러나 2024년 이 터미널들의 평균 이용률은 38%(EU 평균 이용률 52%)에 불과했고, 실제 독일 가스 공급에서 차지한 비중은 8%에 그쳤다. 이후 독일은 손실 보전을 위해 40억 유로(약 6조 원)의 국가 보조금을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과잉 설비', '좌초자산 리스크'라고 경고했지만 위기의 공포가 그 경고를 덮었다. 한국 역시 위기를 빌미로 LNG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을 정책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기 과제: 12차 전기본, 전환의 방향을 결정할 기회

유럽은 위기를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EU는 에너지 수요 감축, 공급 다변화, 재생에너지 가속 투자를 동시에 추진했고, 탈탄소화가 결국 최선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 한국도 지금 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2026년 4월 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근본 개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 유지, LNG 발전 장기적 퇴출, LNG 중심 지역난방을 히트펌프 등 재생열 중심으로 전환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방향은 맞지만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

① 완전한 탈석탄 시점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원칙을 유지한다면서도 실제로 안보자원화라는 명분으로 21곳을 비상 전원으로 남기면서 가동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위기처럼 언제든지 유예될 수 있는 계획은 탈석탄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CCUS를 활용하는 ‘조건부 스탠바이’ 상태 유지는 완전한 퇴출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량요금(CP) 지급은 사실상 화석연료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연장이자. 12차 전기본에서 석탄발전 완전 퇴출의 법적 시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LNG 이용률 하락이 아닌 설비 퇴출이 핵심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 기업 빈그룹은 베트남 최대 규모의 LNG 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추진할 방침임을 베트남 정부에 통보했다. LNG 가격이 중동 전쟁으로 급등하면서 수입 의존형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빈그룹은 해당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LNG 500만 톤이 필요하고, 수입 비용만 연간 35억~38억 달러에 달해 외환에 심각한 압박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 선언에서 ‘LNG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체 발전량 중 LNG 발전 비중이 줄어든다는 의미일 뿐,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설비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차 전기본에서 2023년 약 43.2GW의 LNG 발전 설비 규모를 2038년까지 26GW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작 12차 전기본에서도 LNG 설비용량 감소 없이 단순히 이용률만 낮추겠다는 하는 것은 11차 전기본을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다.

베트남의 사례와 같이, LNG 발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대체 물량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직접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석탄을 줄인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 그 자리를 또다른 화석연료인 LNG로 채우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화석연료 ‘갈아타기’에 불과하다. 외부의 지정학적 위기는 반복되며 지금의 고유가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기본 수립에 기본 가정으로 삼아야 한다.

장기 과제: 가스 의존도 축소를 위한 단계적 경로 설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LNG 발전은 점점 더 비효율적인 자산이 된다. 지금 짓는 LNG 발전소는 20~30년 뒤 반드시 좌초자산이 된다. 이미 탈석탄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소 자산 정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LNG는

그 다음 차례다. 정부는 12차 전기본과 이후 계획에서 신규 LNG 제한을 넘어, 기존 LNG 설비의 단계적 축소 경로와 시한을 포함해야 한다.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만으로도, 같은 해 호르무즈를 통과한 LNG 전량(8,200만 톤)이 생산했을 전력량(600TWh)을 대체할 수 있다. 이는 가스가 더 이상 '브릿지 연료'로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아님을 입증한다. 한국도 **LNG 발전소 건설 비용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 구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화석연료 수입에 쓰이는 막대한 외화를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현재의 전력시장은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건설비와 유지비를 보전해 주는 '용량요금(CP)' 제도를 통해 가스발전소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LNG 발전소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숨겨진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LNG 발전에 대한 용량요금을 폐지하여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그 재원을 유연성 자원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

결론: 위기 관리에서 구조적 전환으로

해협이 봉쇄되자 전기요금 불안이 커지고, 석유화학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치솟는다. 정부는 26조원의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것이 화석연료 의존 경제의 현실이다.

화석연료 충격을 막는 데 써야 할 예산이 오히려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빠져나갔다. 지금 한국 정부가 구조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다음 위기 때 또 수십조 원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 위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석탄화력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투쟁 그리고 공공 재생에너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제용순

2026. 4. 7(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전노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환영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연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적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더라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LNG 발전소 대체 건설과 전환 배치 교육이다. 물론 22대 국회에서 전환에 따른 지원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완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정부는 2년에 한 차례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확정하고 있다.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5년 2월 가장 최근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화력 폐쇄 및 대체(2025.02.21.)

발전사	발전소	호기	10차 전기본	발전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체지역
					폐쇄 일정	대체 발전	
남동	삼천포	1	2021.04	폐쇄 완료	-	-	-
		2	2021.04	폐쇄 완료	-	-	-
		3	2024.12	2026.10	2027.04	LNG(2027.04)	경남 고성
		4	2024.12	2026.10	2027.04	LNG(2027.04)	경남 고성
		5	2027.07	2027.12	2028.12	LNG(2028.12)	경기 화성
		6	2028.01	2028.01	2029.11	미정(2029.11)	미정
	영흥	1	2034.09	2034.06	2034.06	미정(2034.06)	미정
		2	2034.12	2034.12	2034.12	미정(2034.12)	미정
		3	-	-	2038.06	양수(2037.12)	금산

발전사	발전소	호기	10차 전기본	발전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체지역
					폐쇄 일정	대체 발전	
남부	하동	1	2026.06	2027.03	2026.06	LNG(2026.12)	경북 안동
		2	2027.07	2027.12	2027.12	LNG(2027.12)	경남 하동
		3	0228.06	2027.12	2027.12	LNG(2027.12)	경남 하동
		4	2028.12	2028.12	2028.12	LNG(2028.12)	미정
		5	2031.06	2031.06	2031.06	LNG(2031.06)	경기 용인
		6	2031.12	2031.12	2031.12	LNG(2031.12)	경기 용인
동서	당진	1	2029.12	2029.12	2029.12	LNG(2029.12)	신호남
		2	2029.12	2029.12	2029.12	LNG(2029.12)	신호남
		3	2030.09	2030.09	2030.09	LNG(2030.09)	경기 용인
		4	2030.09	2030.09	2030.09	LNG(2030.09)	경기 용인
		5	2036.03	2036.03	2036.03	미정(2036.03)	미정
		6	2036.03	2036.03	2036.03	미정(2036.03)	미정
		7	-	-	2037.03	양수(2037.06)	전남 곡성
		8	-	-	2037.12	미정(2037.12)	미정
	호남	1	2021.12	폐쇄 완료	-	-	-
		2	2021.12	폐쇄 완료	-	-	-
	동해	1	2029.09	2029.09	2029.09	LNG(2029.09)	강원 동해
		2	2029.09	2029.09	2029.09	LNG(2029.09)	강원 동해
	서부	태안	1	2025.12	2025.12	2025.12	LNG(2025.12)
2			2025.12	2027.04	2026.12	LNG(2026.12)	충남 공주
3			2028.12	2028.12	2028.12	LNG(2028.12)	전남 여수
4			2029.12	2029.12	2029.12	미정(2029.12)	미정
5			2032.12	2032.12	2032.12	LNG(2032.12)	경기 용인
6			2032.12	2032.12	2032.12	LNG(2032.12)	경기 용인
7			-	-	2037.12	미정(2027.12)	미정
8			-	-	2037.12	미정(2037.12)	미정
중부	보령	1	2021.12	폐쇄 완료	-	-	-
		2	2021.12	폐쇄 완료	-	-	-
		3	-	-	2038.04	미정(2038.04)	미정
		4	-	-	2038.06	미정(2038.06)	경북 봉화
		5	2025.12	2026.06	2026.06	LNG(2026.06)	충남 보령
		6	2025.12	2027.12	2027.12	LNG(2027.12)	경남 함안
		7	-	-	2038.06	미정(2038.06)	미정
		8	-	-	2038.12	미정(2038.12)	미정

위 표에서 보듯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은 확정되었지만, LNG 발전소와 양수발전소 대체 건설에 대한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대체 발전소 건설 계획 자체가 미정이거나 부지가 있어도 민원으로 인해 착공조차 못 한 곳도 많다. 지난달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착공했다라도 LNG 발전소 준공 계획보다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5개월까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표2 참조)

표2. 폐지 대상 석탄발전소별 대체 LNG 발전소 건설 현황

社명	발전소	용량 (MW)	폐지대체계획 (11차 전기분)	대체건설 현황			
				준공계획	지연	지연사유	
충부	보령	#5	500	'26. 6(보령)	'27.03(보령)	+9개월	• 간섭공정 해소 시운전기간 확보 <small>완료</small>
		#6	500	'27.12(함안)	'28. 9(함안)	+9개월	• 부지조성 지연 <small>완료</small> •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확보 <small>완료</small>
남부	하동	#1	500	'26. 6(안동)	'27. 3(안동)	+9개월	• 주기기 계약 지연 <small>완료</small>
		#2	500	'27.12(하동)	'29.12(하동)	+24개월	• 건설부지 확정 지연 <small>완료</small>
		#3	500	'28.12(미정)	'29.12(고양)	+12개월	• 주택지구 조성일정 조정 <small>완료</small>
		#4	500	'31. 6(용인)	'31. 6(용인)	-	
		#5	500	'31.12(용인)	'31.12(용인)	-	
		#6	500	'31.12(용인)	'31.12(용인)	-	
서부	태안	#1	500	'25.12(구미)	'26. 2(구미)	+2개월	• 가스배관 건설민원 <small>완료</small>
		#2	500	'26.12(공주)	'27.12(공주)	+12개월	• 송전선로 건설민원 <small>진행중</small> - 일부구간 건설 지연 중(한전)
		#3	500	'28.12(여수)	'29. 4(여수)	+4개월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일정 지연 <small>완료</small>
		#4	500	'29.12(아산)	'30. 4(아산)	+4개월	• 발전사업 환평 순연 중 <small>진행중</small>
		#5	500	'32.12(용인)	'32.12(용인)	-	
		#6	500	'32.12(용인)	'32.12(용인)	-	
남동	삼천포	#3	560	'27. 4(고성)	'27.12(고성)	+8개월	• 가스배관 건설민원 <small>진행중</small> - 다수구간 도로점용허가 미취득
		#4	560	'27. 4(고성)	'27.12(고성)	+8개월	
		#5	500	'28.12(미정)	'29.11(화성)	+11개월	• 주기기 계약 지연 <small>진행중</small> - 발주 진행 중(유찰 우려)
		#6	500	'29.11(미정)	'31.12(천안)	+25개월	• 한전 계통연결 <small>진행중</small> - 접속점 변경 협의 중(한전)
	영흥	#1	800	'34. 6(미정)	'34. 6(미정)	-	
		#2	800	'34.12(미정)	'34.12(미정)	-	
동서	당진	#1	500	'29.12(여수)	'30. 9(여수)	+9개월	• 발전사업 환평 지연 <small>완료</small> - #2 대체부지 확정과 연계
		#2	500	'29.12(울산)	'31.12(울산)	+12개월	• 계통보강('31.12) 이후 연계
		#3	500	'30. 9(용인)	'30. 9(용인)	-	
		#4	500	'30. 9(용인)	'30. 9(용인)	-	
		#5	500	'36. 3(미정)	'36. 3(미정)	-	
		#6	500	'36. 3(미정)	'36. 3(미정)	-	
	동해	#1	200	'29.9(미정)			
#2		200	'29.9(미정)				

LNG 발전소 대체건설 현황 자료 [제공=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2 은밀한 민영화

발전산업의 민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가장 필요했던 윤석열 정부는 발전공기업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생에

너지 투자를 제한했다. 윤석열 정권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2022년 8월 31일(수) 한전과 전력그룹사를 재무위험 14개 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향후 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표3 참조)

표3. 전력그룹사 재정 건전화 계획표

구분	22~26년 계획(단위 : 억 원)							합계
	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수원	
자산매각(14%)	15,447	1,963	1,860	3,077	2,721	1,900	759	27,727
사업조정(28%)	24,765	2,605	5,031	13,183	967	4,892	4,075	55,518
비용절감(14%)	22,321	355	235	3,100	1,089	72	1,187	28,359
수익 확대(6%)	9,561	163	-	672	353	18.6	-	10,767.6
자본확충(38%)	70,407	-	-	-	3,753	-	-	74,160
합계	142,523	5,086	7,126	20,032	8,883	6,882.6	6,021	196,553.6
부채비율(%)	<u>369/282</u>	<u>162/159</u>	<u>119/140</u>	<u>214/199</u>	<u>240/197</u>	<u>184/177</u>	<u>153/160</u>	22년/26년

※ 출처 : 전력그룹사 재정 건전화 계획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붙임

위와 같이 전력그룹사의 자산매각 계획은 총 2조 7천억 원이 된다. 이처럼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전력그룹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사업은 순연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표4 참조) 새정부가 전력그룹사에 내린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의 발전설비 용량이 축소되고 민간의 발전산업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표4. 전력그룹사 사업조정 계획표

구분	22~26년 계획(단위 : 억 원)					합계
	22	23	24	25	26	
[한전] 사업 우선순위 조정, 신규사업 최소화	-5,279	-4,589	-4,750	-4,698	-5,449	-24,765
[남동] 사업 시기 조정	-	-	-	-	-715	-715
국내 신재생 신규사업 철회	-58	-225	-168	-100	-232	-783
국내 신재생 지분투자 축소 등	-	-53	-29	-	-404	-486
해외사업 지분투자 축소	-257	-94	-95	-98	-365	-909
합 계	-315	-372	-292	-198	-1,716	-2,893
[동서] 신재생 사업 투자축소	-	-	-513	-781	-726	-2,020
신재생 신규사업 철회	-	-58	-1,896	-334	-723	-3,011
합 계	-	-58	-2,409	-1,115	-1,449	-5,031

구분	22~26년 계획(단위 : 억 원)					
	22	23	24	25	26	합계
신재생 자체 사업 조정	-1,369	+145	-480	-	-	-1,704
신재생 지분투자 조정	-487	+67	-935	-834	-1,681	-3,870
설비보강 조정	-42	-559	-289	-	-295	-1,185
해외사업 조정	-184	-717	-1,565	-2,464	-1,392	-6,322
합 계	-1,312	-1,208	-3,909	-2,056	-64	-8,549
[중부] 국내 신재생 지분투자 조정	-525	-	-	-	-	-525
해외 신재생 신규사업 철회	-	-442	-	-	-	-442
합 계	-525	-442	-	-	-	-967
[남부] 발전건설 조정	-30	-1,117	-834	-184	+586	-1,579
신재생 자체 사업 조정	-430	+296	-	-	-	-134
신재생 지분투자 조정	-146	-258	-1,341	-482	-220	-2,447
해외사업 조정	-	-23	-148	-426	-105	-702
합 계	-606	-1,102	-2,323	-1,092	+261	-4,862
[한수원] 신고리 건설사업 조정	-130	-121	-97	-56	-	-404
설비보강 사업 시기 순연	+561	-831	-1,310	-1,211	+2,049	-742
신재생 신규사업 철회	-71	-628	-721	-19	-138	-1,577
해외 신규사업 철회	-429	-330	-	-450	-143	-1,352
합 계	-69	-1,910	-2,128	-1,736	+1,768	-4,075

기후 위기에 의한 국제적 핵심 이슈가 재생에너지인 점을 고려할 때 발전공기업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역무를 마다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향후 그 책임은 무겁게 다가올 것이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전력그룹사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부채비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권고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9월 전력거래소를 통해 등록된 발전사 회원 수가 6천 개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너도나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뛰어들다 보니 국가 전체의 발전산업의 중복투자 와 체계적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여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빛 반사를 통한 주민 갈등을 여기저기서 일으키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기 설치하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간지방에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저주파소음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는 발전노동자를 저임금 일자리 양산으로 생활임금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에서 본 것처럼 국제 유가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은밀한 민영화를 멈추고 공공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3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

발전노조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전노동자도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의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민영화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만들었다. 또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공공기관으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로 한전에서 발전사로 쪼개진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발전노동자는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어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에 2022년부터 함께해 왔다.



발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022년 10월 29일(토) 14시 용산 대통령실 앞]



414 기후정의 파업 투쟁
[2023년 4월 14일(금) 14시 세종 산업부 청사 앞]



발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023년 11월 11일(토) 12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정의로운 전환 투쟁
[2024년 3월 30일(토) 14시 태안터미널 앞]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24년 12월 6일(금) 15시 30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



2025 투쟁선포 발전노동자 현장간부 결의대회
[2025년 3월 19일(수) 14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2025 투쟁선포 발전노동자 현장간부 결의대회
[2025년 3월 19일(수) 14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
[2025년 5월 31일(토) 14시 창원 시청광장 앞]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
[2025년 5월 31일(토) 14시 태안터미널 앞]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8월 27일(수)~29일(금) 보령/신보령지부 현장순회]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8월 27일(수)~29일(금) 보령/신보령지부 현장순회]



발전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
[2025년 8월 27일(수) 14시 삼각지역]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8월 27일(수)~29일(금) 보령/신보령지부 현장순회]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8월 27일(수)~29일(금) 보령/신보령지부 현장순회]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9월 23일(화)~25일(목) 영흥지부 현장순회]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9월 23일(화)~25일(목) 영흥지부 현장순회]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10월 27일(월)~29일(수) 태안지부 현장순회]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10월 27일(월)~29일(수) 태안지부 현장순회]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한국발전공사 설립
[2025년 11월 15일(토) 정의로운 전환 결의대회]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한국발전공사 설립
[2025년 11월 15일(토) 정의로운 전환 결의대회]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11월 18일(화)~20일(목) 하동지부 현장순회]



발전노조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선전
[2025년 11월 18일(화)~20일(목) 하동지부 현장순회]

4 발전노조의 요구안

발전노조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이면서 오랜 기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했다. 그리고 2023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연구했고 2024년은 “공공 재생에너지 연대”에 참여하며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추진했다. 발전노조가 이런 연구를 시민사회단체 특히, 환경단체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노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동안 정부는 발전회사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회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윤석열 정권에서 내린 혁신가이드라인 지침 철회 이후 재생에너지 분양에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고만 할 뿐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갖는 의미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문제에도 평등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전환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진정한 뜻을 실천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발전노조는 2022년부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노조 요구안”을 제안했고 2025년 9월 18일 제98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노조 요구안

- 발전 6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라!
- 집단해고 도서발전노동자를 진짜 사장 한국전력이 직접 고용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발전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하라!
- 민자발전소를 공영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 발전노조 해고자복직을 이행하라!

1. 발전 6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라!

민영화를 위해 한전에서 발전 6사로 분할된 발전산업을 통합해야 한다. 6개 쪼개진 발

전공기업은 중복적인 본사 관리 업무와 구매 경쟁에 따른 발전 연료구매비 상승 등 엄청난 비효율과 커다란 비용 낭비를 가져왔다. 또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기형적인 전력 거래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행정으로 전력 구매비용까지 상승시켰다.

나아가 기후 위기 극복하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 6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해야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건설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투자의 93%가 민간 자본이고 그중 68%는 해외 투기자본이다. 민간 자본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멈추고 발전 6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발전공기업이 주도해서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2. 집단해고 도서발전노동자를 진짜 사장 한국전력이 직접 고용하라!

2023년 6월 9일 법원은 한전이 도서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주)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도서발전노동자의 근로자지위가 진짜 주인인 한전에 있다고 선고한 것이다. 한전이 직접 운영하다가 1996년부터 외주 위탁한 도서발전운영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린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하지만 한전은 법원판결조치 인정하지 않고 다시 불법적으로 도서발전운영을 전기검침 전문 자회사인 한전MCS로 떠넘겼다. 나아가 근로자지위를 인정받는 노동자들은 소송을 취하한 도서발전노동자만 한전 MCS로 전적을 허용하고 소송을 유지한 184명을 집단해고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전은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도서발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발전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하라!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따라 2038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61기 중 37기가 폐쇄될 계획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현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한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가 해고의 위협에 놓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

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가 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석탄발전소 37기 중 22기가 LNG 발전소로 전환되더라도, 발전소 노동자의 4,911명은 전환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사회적 필요 때문에 결정됐다. 그렇다면 발전소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해고 문제도 개별노동자가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되지 않아야 정의로운 전환이다.

4. 민자발전소를 공영화하여 공공성 강화하라!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 많은 병폐를 낳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43조 원에 달했고, 특히 에너지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 한전의 적자는 무려 32조 원을 기록했다. 전기요금 또한 엄청나게 올랐다. 주택용 기준으로 2021년 킬로와트 당 109.2원 하던 것이 2023년에는 149.8원으로 37% 넘게 올랐다.

반면 민자발전사는 떼돈을 벌었다. 2022년 한전이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그해 한전이 민자발전사에 전력을 사들이기 위해 지급한 돈은 39조 원이 넘는다. 민자발전사가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21년에 벌어들인 17조 원보다 두 배가 넘는 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과 노동자 민중은 엄청난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에 고통받았지만, 민자발전사는 이를 이용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발전소 재공영화를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프랑스가 EDF 주식 100% 재매입하였고 멕시코, 볼리비아 등 남미에서도 에너지 재공영화를 했다. 우리도 전력산업의 은밀한 민영화 등 모든 형태의 민영화를 당장 멈추고 민자발전소를 공영화해서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5. 발전노조 해고자복직을 이행하라!

발전노조의 역사는 민영화 저지 투쟁의 역사다. 전력산업 민영화로 발생할 전기요금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발전노동자의 총파업은 시민 모두를 위한 투쟁이었다. 발전노조 해고자는 바로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희생된 해고자이다. 정부와 발전사는 하루속히 발전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특별위원회를 통한 “권고안”과 “중재안”이 있었지만, 발전회사는 끝내 6명 해고자복직을 거부했다. 그중 3명은 복직되지 못한 채 쓸쓸히 정년을 마쳤다. 다시 한번 요청한다. 발전노조 해고자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5 발전공기업 통합의 방향

발전노조는 2001년 4월 2일 한전으로부터 분사 이후 한전으로 수직통합을 최초로 요구했고 이후 발전 5사 통합, 발전 6사 통합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지만, 원칙적인 한전으로 수직통합은 변함이 없었다. 발전노조가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발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발전노조가 기후정의를 위한 탈석탄, 탈핵을 모두 해결하는 방안으로 발전 6사 통합을 새롭게 요구하는 것도 정의로운 전환이 시대정신이고 발전노동자에게 해당한다면 원자력발전노동자도 탈핵에 대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전노조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통합 논의에는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시민사회가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요구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이관했던 양수발전소는 다시 통합하는 발전공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뜬금없이 양수발전소를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건설안으로 양수발전소를 발전공기업에서 신규로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기존의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사업 변화를 추구한다면 신설하는 발전공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집중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여기저기서 신규 재생에너지공사에 대한 설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발전노조는 명확하게 반대한다. 만약 재생에너지공사가 설립된다면 지금의 발전공기업은 좌초 자산만 떠안게 된다.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부터 LNG 발전소의 연간 이용률

이 15%를 맡돌 것이다. 그렇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발전공기업 발전노동자를 어디로 배치할 것인가?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안 되는 것을 언론으로 띄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6 재생에너지 공공성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생활하는데 전기는 가스, 물, 의료, 집과 마찬가지로 필수 공공재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IMF 이후 한전으로 통합되어 있던 발전 부분을 6개 자회사로 분사하고 전력거래소를 만들어 전력을 사고팔고 있다. 현재 전력거래소를 통해 등록된 발전사 회원 수가 6천 개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너도나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전체 발전산업의 중복투자와 체계적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6개로 쪼개진 발전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매각을 위해 분리한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탈석탄, 탈핵에 대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도는 수많은 민간투자와 중복투자로 인해 자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다. 풍력발전기 또는 태양광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전기의 주파수 관리를 위해 가장 높은 가격의 풍력발전기부터 차단하는 컷 테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송전선로 추가 연결 문제 등 체계적 관리 부실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산업의 전체 용량 60%가 민자발전사이며 신규 해상풍력 투자의 93%가 민자발전사이고 이 중 63%가 외국 자본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재무건전화 계획을 통해 자산을 매각했을 때 재생에너지에서 민영화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해상풍력에 대한 재생에너지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이다. 이것을 20년 이상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민자발전사에 의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확대될수록 금융 조달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증가한 비용은 모두 전기요금으로 반영할 것이며 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해상풍력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장기간의 민원 협상 문제로 투자 철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어민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만약 민자발전사가 이 문제를 돈으로만 풀려고 한다면 결국, 전기요금만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발전공기업과 민자발전사 간의 건설비를 비교했던 것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 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지에 24기의 LNG 발전소를 대체하여 건설한다고 해도 4,911명(정규직:1,221명, 비정규직:3,690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 결과만을 보더라도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2040년까지 61기 석탄화력발전소 모두를 폐쇄하겠다고 하며 신규 원자력발전소도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폐쇄되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과 일터에 관한 내용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면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더더욱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필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대책으로, 신규로 생겨나는 공공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이 신설된다면 시기적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인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발전공기업이 관리해야 한다. 바람과 태양이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이상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를 대신해 발전공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할 때 민자발전사의 이윤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가 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이 이윤이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로 전기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7 맺음말

현재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지난 12월 국회에 발의하였고 발전 5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은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 어디로 전환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반발이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대체하는 발전소의 운영 시점이 달라 발전공기업 내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올해 폐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중단하고 일부 연장했다. 국제유가 수급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것까지 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해법으로 정부는 공공 재생에너지의 장기적 투자와 계획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통과시켜 공공 재생에너지 투자를 발전공기업인 한국발전공사가 하게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부가 계획하는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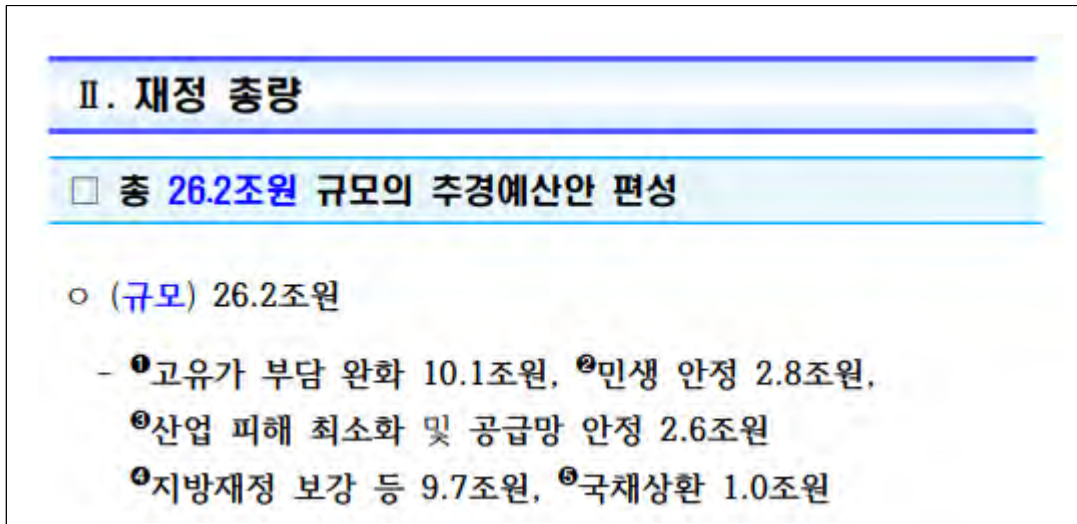
26년 추경을 통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분석

2026. 4. 7.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1. 총량분석

-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1회 ‘추경규모’를 26.2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실제 총지출 증가액은 25.2조원이다.

그림 1 기획예산처 예산안 홍보자료에서 제시한 추경 규모



* 기획예산처 2026년 제1회추경 예산안 홍보자료

표 1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총량 변화

(단위: 조원, %, %p)

항목	구분	25년 본예산	25년 2회 추경	26년 본예산 (a)	26년 추경안 (b)	추경안 증가 (c)=(b)-(a)
총수입	금액	651.6	642.4	675.2	700.6	25.4
총수입	증가율(전년비)	6.4	4.9	3.6	7.5	3.9
총지출	금액	673.3	703.3	727.9	753.1	25.2
총지출	증가율(전년비)	2.5	7.1	8.1	11.8	3.7
통합재정수지	금액	-21.7	-60.8	-52.7	-52.5	0.2

항목	구분	25년 본예산	25년 2회 추경	26년 본예산 (a)	26년 추경안 (b)	추경안 증가 (c)=(b)-(a)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0.8	-2.3	-1.9	-1.9	
관리재정수지	금액	-73.9	-111.6	-107.8	-107.6	0.2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2.8	-4.2	-3.9	-3.8	
국가채무	금액	1273.3	1301.9	1413.8	1412.8	-1
국가채무	GDP대비	48.1	49.1	51.6	50.6	

* 기획예산처,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홍보자료

- 기획예산처가 언급하는 추경규모와 총지출 증가액 차이 1조원은 국채상환액이며, 이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총지출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정부가 제시한 추경규모는 실제 총지출 규모에 따른 재정 확장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 이 문제는 이번 추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추경을 설명할 때 총지출 증감액과 별개의 ‘공식 추경규모’를 제시해 왔고, 그 산정 기준도 해마다 달라졌다.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인 25년 제 2회 추경에서 총지출 규모는 기정액(25년 1회추경) 대비 14.9조원 증대되었는데 정부가 주장한 추경규모는 30.5조원이었다. 이는 세입감액 경정규모 10.3조원 및 세출 감액경정 규모 5.3조원을 모두 추경규모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추경의 실질은 총지출이 얼마나 변하는가에 있으므로, 추경규모 역시 총지출 증감액 기준으로 일원화해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실제로 과거 정부가 설명하는 추경규모와 실제 총지출 증가액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정부가 설명하는 추경규모는 실제 총지출 증가액과 자주 다르며, 그 차이도 작지 않다. 특히 2020년 1회~4회 추경 각 공식 추경규모 합계와 실제 총지출 증가액의 차이가 24.6조원에 달했고, 2021년 2차 추경 확정 기준으로도 2.9조원 차이가 났다. 2026년 역시 다시 1조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즉,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표 2 과거 총지출 증가액과 정부 추경 홍보자료에서 언급하는 추경 규모 비교

연도/추경	총지출 증가액	정부 주장 추경규모	차이	비고
2020년 1회~4회 추경합	42.4조원	67.0조원	24.6조원	2020년 네 차례 추경의 공식 규모 합계와 총지출 증가액 합계 비교
2021년 1차 추경	14.9조원	14.9조원	0	이 경우는 일치
2021년 2차 추경 정부안	31.8조원	33.0조원	1.2조원	감액경정이 빠진 공식 규모
2021년 2차 추경 확정	32.0조원	34.9조원	2.9조원	총지출 기준 국회 증액 2.6조원, 감액 2.4조원 반영 후
2025년 2차 추경	14.9조원	30.5조원	15.6조원	세입감액 경정 10.3조원 및 세출감액 경정 5.3조원 모두 추경규모에 포함
2026년 추경	25.2조원	26.2조원	1.0조원	국채상환 1조원 포함 여부 차이

* 각 연도별 추경 홍보자료 분석

- 총지출 변동 규모와 추경규모가 다른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 첫째, 2026년 추경규모와 총지출 증대규모가 상이한 것처럼 국채상환 규모를 포함하거나 불포함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
 - 둘째, 세출증액 경정과 감액경정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순증규모를 말하거나 증액규모만 말하는 경우가 각각 존재한다.
 - 셋째, 세입감액 경정이 발생했을 경우 세출 증액 경정에 세입 감액경정까지 포함해서 추경규모를 정할 때도 존재한다.
 - 넷째, 심지어는 기금운용변경 규모를 추경규모에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 이외에 교부세, 교부금 지출액 규모를 추경에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추경규모를 제시하기도 한다.

표 3 정부 추경 규모 기준 변화

기준 항목	2004년	2005년	2016년	2020년	2021년 2회 추경	2022년 2회 추경	2026년 추경
증액·감액 상계 여부		상계		미상계	미상계	미상계	감액 없음
국채상환액 포함			포함		미포함 (2조원 상환했으나 제외)		포함(1조원)
세입 감액경정액 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기금계획변경안 포함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 각 연도별 추경 홍보자료 분석

- 즉, 추경 규모는 총지출 증감액으로 일원화하고 별도로 총수입 증액 경정액, 총수입 감액 경정액 및 총지출 증액 경정액, 총지출 감액 경정액을 병기하면 추경을 통해 증감 되는 재정 총량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 그런의미에서 이번 26년 추경을 총수입 증가액, 총지출 증가액으로 추경에 따른 재정 총량을 파악해보도록 하자. 26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총수입 증가액은 25.4조원, 총지출 증가액은 25.2조원이며, 총수입 증가액이 총지출 증가액보다 0.2조원 더 많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0.2조원 개선된다.
- 또한, 관리재정수지 개선은 0.2조원이나 국채 상환은 1조원으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때문이다.

2. 세부사업별 분석

- 정부는 3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국회 각 상임위는 4월 2일부터 심의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공식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는 4월 5일 기준으로도 추경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즉, 국민과 언론은 추경예산안을 아직 보지 못한 채, 기획예산처의 홍보자료와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다.
- 이에 현재까지도 예산안을 통해 어떤 세부사업에서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다. 물론, 국회에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분석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에게는 추경안 사업설명 자료가 배포되었으나 이는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심지어 예결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조차 본인이 속한 상임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설명자료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 즉, 국민과 언론은 물론 예결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조차 추경안 각 세부사업별 증감액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안 심의에 임하게 된다. 정부는 국회 예산정책처 또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자료를 제공하여 추경 사업 설명자료 자료를 내놓기는 하나 이는 예산정책처 및 전문위원의 해석과 시각이 들어간 2차 가공 자료에 불과하여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체 추경 원자료는 알기가 어렵다.
- 이에 26년 제1회 추경 전체 세부사업을 각 부처가 국회 예결위원에 제출한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하여 통합하여 전체 부처 추경안 세부사업별 증액 순서대로 정렬하여 공개 한다.

표 4 26년 추경안 전체 세부사업 증가액 정렬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	세부사업 명	26본예산	26추경안	증가액	증가율	의미
예산처	일반회계	예비비	4,000,000	9,000,000	5,000,000	125%	유가 최고액에 따른 정유사 지원
행안부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0	4,825,185	4,825,185	순증	고유가 지원금
교육청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내국세 증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
행안부	일반회계	보통교부세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내국세 증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
산자부	일반회계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지원	135,036	608,431	473,395	351%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등
중기부	소상기금	소상공인지원(용자)	3,362,000	3,682,000	320,000	9.5%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 용자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급여	9,839,997	10,122,834	282,837	2.9%	수급자 수 및 단가 증가에 따른 조정
문체부	관광기금	관광산업 용자 지원(용자)	644,066	924,066	280,000	43.5%	관광산업 용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일반)	627,325	880,349	253,024	40.3%	디지털신산업 기술분야 직업훈련비, 훈련 수당

부처	회계	세부사업 명	26본예산	26추경안	증가액	증가율	의미
중기부	중진기금	긴급경영안정 자금(용자)	250,000	500,000	250,000	100%	긴급경영안정 자금 용자
기후에너지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648,000	868,469	220,469	34.0%	태양광 및 풍력 용자
국세청	일반회계	압류재산공매(채납징수관리압류재산공매)	14,868	228,232	213,364	1435%	국세채납관리단 운영
중기부	중진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20,000	990,000	170,000	20.7%	창업초기펀드, 지역성장펀드, 재도전펀드 출자 증액
중기부	일반회계	창업저변확대	24,830	189,630	164,800	664%	창업코칭 프로그램 등
산자부	예특회계	석유비축사업출자	55,300	213,733	158,433	286%	비축유 구입 및 비축지 유지보수
중기부	중진기금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용자)	1,605,800	1,755,800	150,000	9.3%	AI, 딥테크 정책자금 용자
재경부	공자기금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9,163,856	29,270,456	106,600	0.4%	국고채 발행 금리 인상 대비
재경부	공자기금	지방채인수(용자)	100,000	200,000	100,000	100%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수요 증가
산자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70,500	170,500	100,000	142%	무역보험기금출연
중기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180,000	100,000	125%	신용보증기금출연
중기부	일반회계	기술보증기금출연	60,000	160,000	100,000	167%	기술보증기금출연
중기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50,203	250,203	100,000	66.6%	수출지원서비스(수출바우처) 등
중기부	중진기금	신시장진출지원 자금(용자)	316,378	416,378	100,000	31.6%	수출기업 용자금
중기부	일반회계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39,856	338,256	98,400	41.0%	국가전략산업 지원
교육청	일반회계	국가시책 교부금	1,261,828	1,352,842	91,014	7.2%	내국세 증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
기후에너지부	예특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3.9%	전기 화물차지원
고용 노동부	임채기금	체불청산 지원 용자(용자)	70,635	160,579	89,944	127%	체불 발생액 증가 대응
국토 교통부	교특회계	대중교통비환급지원	557,970	645,678	87,708	15.7%	정액제 대중교통 환급률 상향
중기부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02,056	489,056	87,000	21.6%	난계공정 시활용 지원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012,830	1,092,963	80,133	7.9%	신규 지원 수요 증가 대응
산자부	일반회계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개발(R&D)	0	80,000	80,000	순증	
중기부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461,838	536,918	75,080	16.3%	
농수산부	지특회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30.2%	
행안부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954,058	1,024,248	70,190	7.4%	내국세 증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
농수산부	축산기금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용자)	250,000	315,000	65,000	26.0%	
기후에너지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4,332	276,712	62,380	29.1%	
중기부	소상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육성	131,069	191,389	60,320	46.0%	
기후에너지부	전력기금	S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217,116	275,916	58,800	27.1%	
농수산부	농지기금	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72,715	58,771	421%	
행안부	일반회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763,247	819,399	56,152	7.4%	내국세 증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
문체부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430,000	480,000	50,000	11.6%	
문체부	문진기금	예술산업금융 지원시범사업(용자)	20,000	70,000	50,000	250%	
농수산부	농안기금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2,716	172,716	50,000	40.7%	
중기부	중진기금	재도약지원자금(용자)	612,500	662,500	50,000	8.2%	
해양 수산부	농특회계	어업인 면세경유 유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0	46,819	46,819	순증	
교육청	일반회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30,914	676,421	45,507	7.2%	내국세 증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
교육청	일반회계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13	601,263	40,450	7.2%	내국세 증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
중기부	소상기금	소상공인성장지원	621,243	661,243	40,000	6.4%	

부처	회계	세부사업 명	26본예산	26추경안	증가액	증가율	의미
문체부	영발기금	영화 창제작 지원	40,929	79,419	38,490	94.0%	
기후에너지부	전력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151,276	36,324	31.6%	
문체부	영발기금	영화정책지원	28,099	64,199	36,100	128%	
산자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81,074	214,074	33,000	18.2%	
문체부	문진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28,000	60,000	32,000	114%	
문체부	관광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8,348	78,948	30,600	63.3%	
해양수산부	수산기금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101,748	131,748	30,000	29.5%	
교육청	고특회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62,461	290,761	28,300	10.8%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전세사기피해자최소지원금지급	0	27,941	27,941	순증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84,752	311,221	26,469	9.3%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907,959	933,709	25,750	2.8%	
중기부	소상기금	소상공인재기지원	351,649	376,249	24,600	7.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37,734	60,315	22,581	59.8%	
과기부	기후기금	CCU메가프로젝트(R&D)	20,000	42,405	22,405	112%	
기후에너지부	기후기금	CCU메가프로젝트(R&D)	20,000	42,405	22,405	112%	
산자부	에특회계	석유품질관리사업 지원	16,314	38,654	22,340	137%	
과기부	장동기금	SI통합바우처	89,775	109,775	20,000	22.3%	
산자부	일반회계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	56,738	76,738	20,000	35.2%	
행안부	일반회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0	19,515	19,515	순증	
고용노동부	고보기금	고용유지지원금	70,225	88,784	18,559	26.4%	
문체부	관광기금	국내관광 역량강화	64,193	81,633	17,440	27.2%	
과기부	일반회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	116,367	132,857	16,490	14.2%	
과기부	일반회계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26,289	142,779	16,490	13.1%	
과기부	일반회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20,610	137,100	16,490	13.7%	
교육청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10,304	225,473	15,169	7.2%	
과기부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97,077	311,375	14,298	4.8%	
행안부	일반회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90,811	204,849	14,038	7.4%	
산자부	지특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409,920	423,920	14,000	3.4%	
복지부	일반회계	긴급복지	405,254	418,329	13,075	3.2%	
기후에너지부	기후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08,575	121,411	12,836	11.8%	
중기부	일반회계	기술혁신기반조성	43,366	55,866	12,500	28.8%	
중기부	일반회계	중소기업해외시장 진출	93,572	105,756	12,184	13.0%	
교육청	고특회계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	910,898	922,898	12,000	1.3%	
고용노동부	지특회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150,108	162,108	12,000	8.0%	
해양수산부	에특회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18,661	29,212	10,551	56.5%	
기후에너지부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	494,027	504,257	10,230	2.1%	
문체부	관광기금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104,474	114,474	10,000	9.6%	
중기부	일반회계	중소기업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66.8%	
복지부	지특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607	53,524	9,917	22.7%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0	9,500	9,500	순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용자)	89,432	98,407	8,975	10.0%	

부처	회계	세부사업 명	26본예산	26추경안	증가액	증가율	의미
문체부	지특회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51,850	60,750	8,900	17.2%	
과기부	지특회계	연구개발특우육성(R&D)	167,343	176,043	8,700	5.2%	
농수산부	농특회계	시설농가 면세유 유기연동보조금 한도지원	0	7,824	7,824	순증	
농수산부	농특회계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7,200	6.2%	
산자부	지특회계	지역산업위기대응	24,667	31,667	7,000	28.4%	
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0	6,602	6,602	순증	
중기부	일반회계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26.5%	
산자부	예특회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76,929	82,929	6,000	7.8%	
산자부	일반회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1,429	347,334	5,905	1.7%	
문체부	관광기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4269	19,939	5,670	39.7%	
기후에너지부	환특회계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31,376	36,976	5,600	17.8%	
중기부	일반회계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원	69,290	74,640	5,350	7.7%	
문체부	문진기금	문화예술향유 지원	327,638	332,738	5,100	1.6%	
복지부	일반회계	보험정책사업 관리	403	5,375	4,972	1234%	
문체부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지원	23,846	28,629	4,783	20.1%	
농수산부	농특회계	무기질비료가격 보조및수급안정지원	15,600	19,800	4,200	26.9%	
문체부	문진기금	예술창작 지원	69,118	73,118	4,000	5.8%	
문체부	문진기금	예술인력 육성	23,897	27,822	3,925	16.4%	
복지부	일반회계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5,909	9,288	3,379	57.2%	
해양수산부	지특회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668	28,612	2,944	11.5%	
조달청	조달특별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지원(1236-345)	3,359	5,998	2,639	79%	
문체부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63,214	65,806	2,592	4.1%	
기후에너지부	기후기금	산업 일자리전환 지원	8,753	11,042	2,289	26.2%	
농수산부	농특회계	농업자금이자보전	729,661	731,816	2,155	0.3%	
복지부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 자원육성 지원	14,586	16,729	2,143	14.7%	
산자부	예특회계	핵심광물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3,777	5,857	2,080	55.1%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0	2,065	2,065	순증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헬기(일반)·산림헬기 도입·운영	193,826	195,826	2,000	1.0%	
산자부	예특회계	석유유통구조개선	761	2,741	1,980	260%	
기후에너지부	환특회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85,309	87,209	1,900	2.2%	
문체부	관광기금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5,617	17,317	1,700	10.9%	
해양수산부	농특회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9,098	80,687	1,589	2.0%	
문체부	일반회계	예술창작활동 지원	32,598	34,094	1,496	4.6%	
기후에너지부	전력기금	전력효율향상	125,922	127,210	1,288	1.0%	
복지부	일반회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6,280	17,567	1,287	7.9%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6,820	108,000	1,180	1.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정책연구개발사업	2,878	3,878	1,000	34.7%	
교육청	일반회계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61,329	62,328	999	1.6%	
문체부	문진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780	1,560	780	100%	
문체부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9,022	89,722	700	0.8%	
중기부	소상기금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564,895	565,495	600	0.1%	
과기부	일반회계	다지털 질서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지원(2027)	27,643	28,143	500	1.8%	

부처	회계	세부사업 명	26본예산	26추경안	증가액	증가율	의미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490	56,890	400	0.7%	
교육청	일반회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750	3,050	300	10.9%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건설산업정보 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4,305	4,438	133	3.1%	
합계			205,118,21	230,306,404	25,194,583	12.3%	

* 각 부처 2026년 사업 설명자료 분석 통합

-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금액이 증액된 세부사업은 ‘예비비’로 총 5조원이 증액되었다. 25.2조원 총지출 증가 중, 5조원은 전체 추경 증대액의 약 20%에 달하는 큰 규모다. 26년 본예산 예비비 4조원에서 추경안에서 5조원이 증액되어 총 9조원이 되었다.
- 예비비 5조원 증액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보상하는 금액으로 편성된 금액이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인 정유사를 지원하는 금액이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되어 어떤 정유사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 수 없다. 정부가 마련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석유 최고가격 손실액을 산정하고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적정 보전액을 산정한다고 한다.
- 이어 두 번째로 큰 세부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및 하위 70% 국민에 10만원(수도권)에서 최대 60만원(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지원금’ 4.8조원이다.
- 세 번째 및 네 번째로 큰 세부사업은 내국세 증대에 따라 약 20%씩 법적으로 추가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인 교육청 보통교부금 및 지방정부 보통교부세로 각각 4.6조원, 4.5조원이다.
- 이상 상위 4개 사업이 18.9조원으로 전체 추경 총지출액 증가액 25.2조원 중 3/4을 차지한다. 이어 추경 증대 금액 순서대로
 -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등의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 4734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 용자사업인 ‘소상공인지원’ 3200억원
 - 수급자 수 및 단가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 2828억원
 - 관광산업 용자를 위한 ‘관광산업 용자 지원(용자)’ 2800억원
 - 디지털신산업 기술분야 직업훈련비 및 훈련 수당 증액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2530억원
 - 긴급경영안정 자금 용자 사업 2500억원,
 - 태양광 및 풍력 용자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2205억원
 -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압류재산공매’ 2134억원

- 창업초기펀드, 지역성장펀드 등 출자 증액에 따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 창업코칭 프로그램 등에 따른 ‘창업저변확대’ 1648억원
 - 비축유 구입 및 비축기지 유지보수를 위한 ‘석유비축사업출자’ 1584억원
 - AI, 딥테크 정책자금 용자를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증액이 그 뒤를 이음.
-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국세수입이 총 25.2조원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순증 규모로만 제시하면 세입 경정의 실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국세수입 경정은 모든 세목이 일률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증액 경정된 세목과 감액 경정된 세목이 동시에 존재한다. 법인세 14.8조원, 증권거래세 5.2조원, 소득세 원천분 4.8조원, 농어촌특별세 5.1조원 등은 증액되어 증액 소계가 29.9조원에 달한다.
 -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4조원, 교육세는 0.8조원, 개별소비세는 0.5조원 감액되어 감액 소계는 4.7조원이다. 즉, 정부가 말하는 국세수입 25.2조원 증가는 29.9조원 증액과 4.7조원 감액이 동시에 발생한 결과일 뿐이며, 이를 단순 순증 규모로만 설명하면 세입 구조 변화의 방향을 놓치게 된다.
 - 특히 감액된 세목의 내용은 단순한 세수 오차 조정이 아니라 정책적 감세, 즉 조세지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액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것이고, 개별소비세 감액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에서는 재정지출과 다르지 않다.
 - 다시 말해, 예비비 5조원을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을 위한 재정지출을 하면서 동시에 유류세 인하라는 방식의 조세지출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 다 본질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국가의 재정 개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정책수단의 다른 표현에 가깝다.
 - 따라서 정부가 추경을 설명할 때 예비비 5조원과 같은 직접 재정지출만 강조하고, 유류세 인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세지출을 별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 추경의 실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출예산만이 아니라 세입 경정 내역까지 함께 보아야 하며, 특히 감세 방식으로 집행되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통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그래야만 정부가 실제로 에너지 가격 인하에 얼마만큼의 재정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억제 대신 가격 인하를 얼마나 우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표 5 26년 추경안 전체 국세사업 증감액 정렬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5본예산	25추경	26본예산	26추경안	증감액	증가율
법인세	88,254,358	83,567,118	86,547,444	101,321,538	14,774,094	17.10%
증권거래세	3,845,400	3,845,400	5,375,303	10,562,085	5,186,782	96.50%
소득세(원천분)	85,349,376	85,349,376	88,966,007	93,763,101	4,797,094	5.40%
농어촌특별세	7,415,300	7,415,300	8,498,826	13,621,157	5,122,331	60.3%
증액 소계(a)	184,864,434	180,177,194	189,387,580	219,267,881	29,880,301	15.8%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00	14,001,191	16,412,159	13,046,366	-3,365,793	-20.50%
교육세	6,040,200	5,776,493	6,443,294	5,648,424	-794,870	-12.30%
개별소비세	9,666,300	8,747,915	9,434,414	8,900,408	-534,006	-5.70%
감액 소계(b)	30,811,300	28,525,599	32,289,867	27,595,198	-4,694,669	-14.5%
증감액 합계(a)+(b)	215,675,734	208,702,793	221,677,447	246,863,079	25,185,632	11.4%

3. 유가 등 공급 정책보다는 수요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우선 돼야

- 26년 추경은 석유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공급 위기에 대한 재정 대응은 원칙적으로 에너지 공급가격 인하보다 에너지 수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전기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화석연료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에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급가격 인하 중심 정책은 단기적으로 체감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가격 상승이 유도하는 소비 절감과 구조 전환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 특히 에너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가격 인하 방식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계층과 업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정유사 지원 5조원과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조세지출 4.7조원을 합한 에너지 공급가격 인하 관련 규모를 9.7조원이며,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원보다 훨씬 크다. 즉,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보호보다도 가격 인하를 통한 공급 정책에 더 큰 재정을 배분하고 있다.
- 반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은 총 5,633억원, 3.3% 증액되었다. 예산사업은 1,777억원, 기금사업은 3,856억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대상은 모두 9개 사업에 불과하다. 예산사업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900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877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사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205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624억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363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128억원, 전력효율향상 13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즉, 추경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도 늘어나기는 했으나, 전체 재정 배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 이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선순위의 역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석유가격 인하를 위한 정유사지원 금액인 예비비 5조원 증액은 단일 세부사업 기준으로 가장 큰 증액이며, 전체 총지출 증가액 25.2조원 중 약 20%를 차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8조원이다.
- 반면 에너지 수요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205억원, 무공해차 보급 900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877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624억원,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588억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363억원 등이다.

표 6 26년 추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57,970	645,678	87,708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기금	산업·일자리전환지원	8,753	11,042	2,289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08,575	121,411	12,836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151,276	36,3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648,000	868,469	220,469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4,332	276,712	62,380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 효율향상	125,922	127,210	1,28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도약지원자금(용자)	612,500	662,500	50,000
	예산사업 합계	2개 사업	2,842,483	3,020,191	177,708
	기금사업 합계	7개 사업	1,833,034	2,218,620	385,58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	9개 사업	4,675,517	5,238,811	563,294

- 개별 사업 단위로는 모두 정유사 지원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보다 훨씬 작다. 정부가 강조하는 고유가 대응의 실제 재정 편성은 수요 절감과 구조 전환보다 가격 인하와 피해 보전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 문제는 이러한 편성이 단기 대응으로는 이해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조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 상승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 개선과 대체에너지 전환

을 유도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해 가격 인하를 반복적으로 보조하면,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추경처럼 정유사 지원 예비비와 유류세 인하 등 공급가격 인하 수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 정부가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재정은 여전히 화석연료 가격 인하를 우선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 더욱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의 증액 규모가 5,633억원이라는 점은, 정부가 스스로 감축인지로 분류한 사업 규모조차 공급가격 인하 관련 지원 규모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유사 지원 예비비 5조원만 놓고 보더라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전체 증액 규모의 약 9배에 달한다.
- 즉, 이번 추경은 일부 감축인지 사업을 늘리기는 했으나, 전체 우선순위 차원에서는 여전히 공급가격 인하가 수요 전환과 신재생 확대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고유가 대응과 기후대응의 방향이 재정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정합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결국 이번 추경의 문제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일부 증액되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큰 재정수단이 어디에 배분되었는가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재정수단은 공급가격 인하와 가격 보전이며,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즉, 정부는 고유가를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사용하기보다, 가격 인하를 통해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의 관점에서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추경이다.

4. 개선방안:

가격 인하 중심 대응 축소, 에너지 수요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 첫째, 고유가 대응 추경의 우선순위를 에너지 공급가격 인하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 에너지 수요 대책 순서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 제한적 가격 조절 순서로 재설계해야 한다. 고유가 대응의 핵심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절감과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효율향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무공해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은 반복되는 화석연료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수단이다. 반면 가격 인하 중심 대응은 단기적 완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유지시키고 전환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둘째, 정유사 지원 예비비와 유류세 인하 등 공급가격 인하 수단은 예외적·한시적 수단으로 축소하고, 그 재원을 에너지 수요 절감 및 전환 투자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 5조원은 단일 세부사업 기준 최대 규모이며,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조세지출까지 포함하면 에너지 공급가격 인하 관련 규모는 9.7조원에 달한다. 반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총 증액 규모는 5,633억원에 그쳤다. 만약 유가 불안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때 이러한 강제 유가 인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고유가 시대 유류 소비를 촉진하고 에너지 수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
- 즉, 정부가 감축과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재정 배분에서는 가격 인하가 구조 전환 투자보다 압도적으로 우선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통한 가격 보전 규모를 줄이고, 그 재원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전력효율향상,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는 가격 인하와 분리하여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정교화해야 한다. 고유가 대응은 보편적 가격 인하보다 취약계층·생계형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이 형평성과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 이번 추경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체 편성 구조상 공급가격 인하 수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는 유류세 인하 등 보편적 가격 조정보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취약계층 직접 지원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배분하여 같은 재정으로 정밀한 지원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 넷째, 고유가 대응 추경의 성과 기준도 단순한 가격 안정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절감, 효율 개선, 신재생 확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격 인하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정책의 성과도 “얼마나 가격을 낮췄는가”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구조적 대응의 성과는 에너지 사용량 감소, 취약계층의 실질 부담 완화,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신재생 설비 확대, 전력효율 향상 등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추경이 단기 물가 대응을 넘어 중장기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 결국 이번 추경의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가격 인하 중심의 공급 정책을 후순위로 돌리고,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경의 1순위로 전환해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는 보편적 가격 인하가 아니라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정교화해야 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별도 부속서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추경 전체의 우선순위를 재구성하는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유가 대응 추경이 단순한 단기 충격 완화를 넘어,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추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

